05_지역간 협력 사업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한 · 큐슈회의 본회의(2007)

| 한 · 큐슈회의 테마별 성과발표회

| 한 · 큐슈회의 부산신항 개요 청취하는 양국 대표단

| 한 · 큐슈회의 리셉션에서의 홍지인 산자부 기획관의 인사

| 한 · 큐슈회의. 공동성명서 교환하는 양국 단장

| 한 · 큐슈회의 본회의 전경(2009)

| 한 · 큐슈회의 금형분과회 회의 모습(2009)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전경(2007, 구마모토)

| 산학관 비즈니스포럼 회의

| 환경비즈니스 미팅

| 한중일 3국 국제기술교류회

| 바이오클러스터 심포지움

| 산학관 제휴 총장포럼

| 참가대표단 MOU조인식

| 환영리셉션에서 3국 대표단들의 협력을 다짐하는 건배

|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포럼 발표회

|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테이프컷팅하는 한중일 3국 대표들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 전경(2009. 엔타이)

| 사전실무자 3국 회의

| 두산 중국공장을 견학하는 대표단

| 전체회의에서 인사하는 서석숭 한국단장(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 환황해 에코테크노 전시회에 참가. 테이프컷팅하는 한중일 3국 대표단(2010)

| 항만물류경제포럼

| 환황해합동 환영만찬회 모습(2010)

06_청소년교류 사업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한국대학생 게이오대학교 방문교류회(1985)

| 한일대학생 기념품 교환

| 게이오대학생들과의 토론회

| 닛산자동차 산업시설견학

| 환영만찬교류회

| 한일양국대학생교류회에서 山一(야마이치)증권의
우에타니 히사미츠 회장과 함께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들(2007)

| 팀별 사업기획회의

| 팀별 사업기획을 하고 있는 학생들(2008)

| 아소 타로(麻生 太郎)총리 방한시 고교생교류 캠프 출신 한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2008)

| 사업발표회 후 입상한 팀과함께

| 진지한 사업발표회장(2010)

| 입상발표에 환호하는 모습

07_기능별 협력사업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정기총회에서 인사하는 박태준 회장 (1982)

총회개회전 회장단 간담(1984)

정기이사회 개최(2009)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활동(2008)

친선활동 후 간친회에서 인사하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2008)

일본대사관저에서의 협회 회장단과의 간친회(2009)

주한일본대사주최 만찬간담회에서 인사하는 조석래 회장(2010)

회원사 간담회 개최(2009)

회원사 간담회에서 강연하는 호사카 유지 교수(2009)

제1장

한일경제협회와 한일 경제협력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제 1 장

한일경제협회와 한일 경제협력

해방 이후 한일경제협력은 크게 교류의 단절기, 정부중심의 교류기, 민간중심의 경제협력기로 구분 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앞선 산업화 경험은 양국의 인적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 되어졌으며, 민간부문의 협력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81년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은 시장확대, 기술이전, 생산조직의 학습, 자본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한일경제협회는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선각 경제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근 세계화와 다자주의 경제협력이 진전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지금의 한일경제는 아시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나아가서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Ⅰ_한국경제와 한일관계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일본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은 한국의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은 정부와 민간 부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협력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양국 교류의 단절기이다. 해방 이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식민경제의 유산으로 군정무역과 한일통상협상에 의해 제한적이지만 양국 간 경제교류는 지속되었다.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민간무역업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교류가 점차 확대되었다. 20년간 양국 관계 단절기의 민간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을 급진전 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둘째, 정부중심의 교류기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정부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던 산업화 초기의 양국 경제교류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핵심 민간경제단체들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정부가 기획하는 의제에 협력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셋째, 민간중심의 경제협력기이다. 1980년대 민주화와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

는 민간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1981년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더욱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은 무역, 기술이전, 자본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해방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 무역은 국교정상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 시기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많은 자본과 기술, 인재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양국 협력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 부품, 기술 등에 집중되었으며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의 심화는 양국 교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수출증가는 일본으로부터의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일본 의존적 경제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능력이 증가하면서 일부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월하게 되었다. 부품 및 소재 분야에 있어서의 의존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구조는 중국 등 동아시아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정부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장의 개척,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생산조직의 관리를 비롯하여 경영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 교류 등도 양국의 경제협력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산업화 경험을 우리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전략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기업 조직에 있어서도 계열화를 정착시켰다. 종신고용 등의 고용관행, 은행중심의 자금조달 방식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부분 한국과 일본의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되었다.

양국 경제협력의 의미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화 이후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협력에 있어 한일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1990년대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경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와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 등 새로운 차원의 협력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Ⅱ_해방 이후 한일경제협력의 전개

해방 이후 국교수립 이전까지 한일 경제관계는 공식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군정무역과 민간 무역업자들에 의해 일정 수준의 경제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해방직후에는 대한경제보국회, 한국무역협회, 적산관리인회(敵産管理人會) 등이 자본가 집단으로 설립되었다. 이중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는 정부주도의 조직으로 자율성은 매우 약하였으나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홍덕률, 1994). 무역업자들의 협의체였던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 설립되어 무역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직을 형성해온 대표적인 민간단체였다. 이들은 식민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했으며 각종 경제통제와 원조경제 체제로 인하여 역할이 제한되었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 민간무역을 통한 개발자금 확보를 의도했던 제1공화국의 통제완화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제1공화국 이후 경제 및 산업정책의 기조가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통한 산업화로 정해지고 한일 경제관계를 제약해왔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민간 경제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표1-1〉 주요 경제단체의 설립

설 립 년 도	기 관 명
1884.	한성상업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1948)
1946.7	한국무역협회
1961.1	한국경제협의회→한국경제인협회(1961.8)→전국경제인연합회(1968.3)

국교정상화 이후 다방면에 걸쳐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타결된 무상 3억, 유상 2억 등의 경협자금 이외에도 대규모 상업차관이 민간차원에서 지원되었다. 제3공화국 정부가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부품수입이 급증하였다. 전자, 조선, 철강, 섬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화 산업의 추진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도입과 기술도입, 제도적 학습과 인적 교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

여 당시 정부 관료들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이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탐구와 학습 등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양국 정상 간의 교류가 성사되면서 '한일 신 시대'가 선언되고 경제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총리는 한국의 40억불 안보경협 차관 요청을 수락하고 인적교류,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까지 이어졌다. '한일 21세기 위원회', '한일경제인포럼' 등 한일 협력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임시 협의체들이 구성되었고 한일관계에 대한 제안이 보고되었다.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992년 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정치, 경제를 포괄한 양국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세계화, 지역주의, 다자주의 및 양자적 FTA 등이 확산되면서 한일 경제협력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가운데 정치적 보수화와 보통국가 논의는 동아시아의 역사논쟁을 가열시키면서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게 되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적극적인 다자주의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의 노력은 더욱 구체화되었지만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쌍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FTA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특히 한일 간의 경쟁구도는 더욱 가열되었다. 일본에 대한 상대적 교역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감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2010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규모로 커지게 되었다. 상대적 교역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대일 무역적자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나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의 형태로 신산업정책이 추진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다자주의 경제협력이 진전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합과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한일 경제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Ⅲ_한일경제협회 설립 의의

1981년 2월 12일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되기까지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같은 해 2월 4일에 작성된 발기취지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아래의 취지문 전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일경제협회 설립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닌 선각 경제인들의 협동적 지혜의 산물임을 확인시켜 준다.

〈발기취지문〉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적으로 긴밀한 교류와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학적 및 경제구조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본은 제1의 교역대상국(과거 15년간 통계: 전체 교역량의 약 30%)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매우 부진하여 자본도입 측면에서 볼 때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 15년간 계속되어온 만성적 무역적자(수출누계 194억불, 수입누계 397억불)는 203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8년 이후 12회에 걸친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계의 개별적인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면에 있어서는 민간주도형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어가고 있고 한일 간의 민간경제교류는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미 1960년에 일한경제협회를 상설 사무국으로 두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좀더 활성화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가칭)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를 설립하고자 이에 발기하는 바이다.

이 취지문이 명시하듯 한일경제협회의 창립목표는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주일 후인 1981년 2월 12일 열린 한일경제협회 창립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보고가 이루어졌다.

〈경과보고문〉

1980년 하반기에 들어서며 한일 양국 경제인 인사 몇 명 사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좀더 강화하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고, 1980년 1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상공회의소연합회에 참석하였던 일본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검토되었다. 1981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포항종합제철 박태준 사장 사이에 이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가 검토되었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981년 수출진흥특별회계 자금 중 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4일 상기 경제4단체와 포항종합제철 대표가 모여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박태준 사장이 발기인 대표로 선임되었으며 창립총회까지의 업무추진을 위탁받아, 박태준 사장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한국철강협회에서 업무를 진행시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되었다.

한일경제협회의 설립은 발기취지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 경제단체는 민간외교기구로서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실행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제2장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제2장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해방 이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65년까지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기본적인 경제운용과 사회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정부 간 교역을 재개할 수 밖에 없었고, 이승만 정부 역시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권유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본과의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양국 민간 경제인들의 의욕적인 활동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정치적 협력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양국 경제협력의 가교와 주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방 후 20년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은 해방 이후 지속되었던 민간 경제인들간의 협력관계와 국가-기업의 유기적 관계 때문이었다.

특히, 한일경제협회 설립의 전신이 된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간담회'와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이 1966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Ⅰ_민간 협력의 네트워크와 한일 경제협력

해방 이후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된 1981년까지의 시기는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해방 이후 1965년까지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 및 경제관계는 단절되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제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20년 동안의 정부 간 교류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960년 일한경제협회가 발족하여 민간 주도의 한일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창구가 제도화된 것은 20년이나 뒤늦은 일이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 면에서 한국의 민간 경제인들은 일본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협력 네트워크가 국교정상화 이후 급격하게 진전된 한일경제협력의 토대가 된 것이다.

국교정상화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의체들이 제도화되면서 양국 협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양국의 경제협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온 민간 경제인들의 협력 때문이었다. 일본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수출주도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인력과 지식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 민간 부분은 양국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협의하고 촉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민간 경제인들은 정부와의 협력 체계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 정책에 긴밀히 협력했다. 민간 부문의 대일 협력 네트워크는 한일 경제협력의 실질적 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시작된 양국의 근대적 경제관계는 해방 후 단절된 양국 관계가운데에서도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지속되었다. 국교정상화 이후에 양국이 상호 의존적 협력체계를 구조화 한 것은 바로 이런 민간 부분의 협력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그리고 한일경제협회는 이러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1981년 발족하여 한일 신 시대를 개척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 해방 후 국교정상화 이전시기, (2) 국교정상화 이후 산업화 시기 민간 경제인들의 교류와 협력의 과정은 한일경제협회 설립의 토대이자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Ⅱ_해방 이후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 경제교류

1. 이승만 정부의 한일 통상정책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이승만 정부에게 기회이자 제약이 되었던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정책은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적극적인 산업화와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우선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통합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한일관계 복원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한 원조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이루어졌다.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비재 중심의 원조가 제공되었고 이중 일부는 일본으로부터 구매되었다. 특히, 산업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술, 원료 등은 많은 부분 일본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일본경제의 부흥을 꾀했다. 원조에 의한 산업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산업화 재원의 확보를 위해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민간무역업자를 활용하고자 했다. 민간무역의 확대는 1960년 이후 한일무역의 급격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건국 이후 양국 교역은 한일통상협상으로 제한적이나마 재개되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계 복원을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8년 연합국최고사령부 명의로 한일무역교역품목을 미군정으로 보내서 한일 무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10월 20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도쿄(東京)회담 이후 양국 무역재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ECA(미국의 경제협조처) 원조자금 결정에 따라 1949년부터 미국은 일본상품 구입을 위한 협상을 종용하였다. 한일통상협상은 1949년 3월부터 1951년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었고 1952년과 1953년 각각 1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본 합의사항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1965년까지 사실상 지속되었다.

〈표2-1〉 한일통상협상의 경과

(단위: 달러)

구 분	1949년(1)	1949년(2)	1950년	1951년
일 정	03.10~22	10.05~14	03.27~04.10	03.22~31
참 가	한국, ECA, SCAP	한국, ECA, 일본, SCAP	한국, ECA, 일본, SCAP	한국, ECA, 일본, SCAP
내 용	무역, 금융	무역, 금융, 선박	무역, 금융, 해운	무역, 금융
무역계획	수출 : 2,929만4천 수입 : 4,868만7천		수출 : 953만5천 수입 : 2,550만	수출 : 1,600만 수입 : 3,200만

주) ECA(미국의 경제협조처), SCAP(태평양최고사령부)

한편 한일 양국 간 수출입협상은 양국의 경제정책과 정책환경을 반영한 것이었다.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일본측 협상주체는 태평양최고사령부(SCAP)였고 일본의 경제적 부흥 계획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직적 지역통합의 입장에서 수출입 목록을 결정하였다. 반면, 한국은 경제안정화 정책기조에 의하여 소비재 중심의 물자와 최소한의 산업운용을 위한 자본재와 공업원료 등을 요구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과 수산물로 식민통치 시기와 비교하면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식

민지 말 주요 수입품이 견직물, 식료품 및 석탄이었던 것에 비해 반제품, 기계, 식료품 및 공업용 원료 등이 수입되었다. 반제품에는 섬유사, 종이, 건축자재 및 방직기계와 전기기계 등이 포함되었다. 1949년을 기준으로 대일 수입계획 중 높은 순위로 나열하면 기계(47.8%), 유연탄(31.4%), 화학 (6.4%), 금속(4.9%), 섬유(3.8%) 등으로 이는 일본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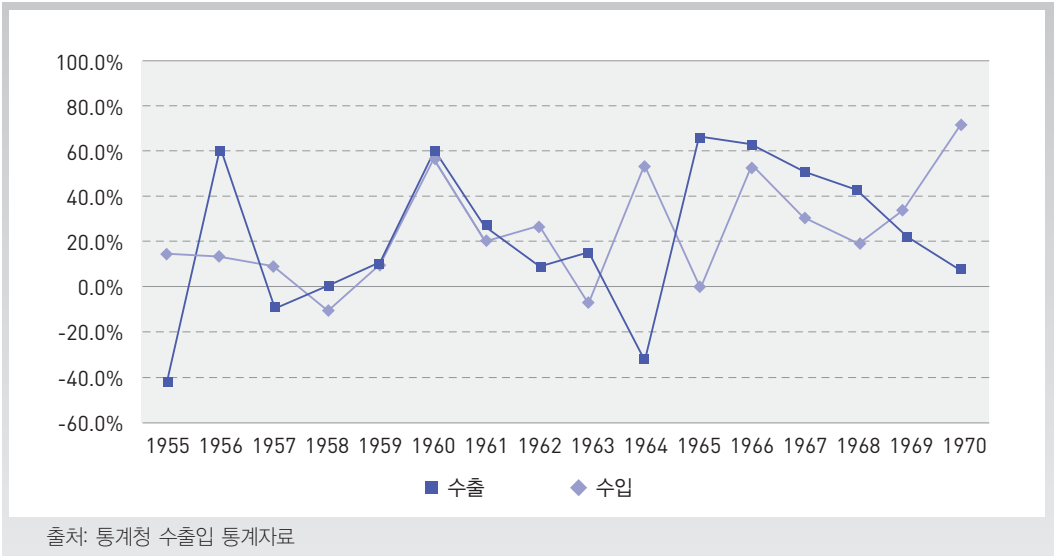
2. 제2공화국의 출범과 한일 경제협력

제2공화국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이승만 정부시기 3개년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원조수입과 수입제한을 통해 수입대체산업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1950년대의 경제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수출을 통한 산업화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해졌고 수출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입자유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 자본, 기계의 도입이 촉진되었고 인적자원의 확보가 우선시 되었다. 이러한 경제정책 이념의 변화는 한일관계를 촉진시키는 국내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간에 국교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었으며, 이와 함께 교역확대를 위한 방안도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 5월 16일 한일통상회담이 재개되어 통상 및 미곡수출입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같은 해 상공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82개 대일수입 금지품목을 해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실상 대일수입규제 조항들이 완화되거나 삭제됨으로써 한일무역 확대의 제도적 장벽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도표2-1〉 대일 수출입 증가율 (%)



출처: 통계청 수출입 통계자료

한편 1960년대 양국관계 변화에 따라 양국 교역액도 대폭 증가했다. 〈도표2-1〉에서 보듯이 1955년 이후 1959년까지 대일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1956년과 1959년 두 차례의 대일교역 중단 조치는 양국 경제교역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그러나 1960년에는 대일수출입 모두 60% 가까이 증가하였고 국교수립 이전까지 연평균 20%에 가까운 대일 수출입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1965년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수출입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투자 등 전반적으로 교역관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는 실질적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것이다.

Ⅲ_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1.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한일경제협력

1951년 시작된 한일회담은 14년간 결렬과 재개가 반복된 끝에 1965년 마침내 타결되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한일 간의 오랜 역사적, 정치적 과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 경제협력을 급진전 시키는 데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처럼 국교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 양국에 형성된 경제적 논리 때문이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경제협력의 내용과 구조, 범위와 형식은 주로 한국의 경제적 필요, 즉 박정희 정부 출범 이후 수출주도 산업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경제협력을 촉발시켰고 양국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1965년 국내의 극렬한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한 것은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국내 산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자본,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정책을 중시함에 따라 양국 민간 경제인들의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는 안정적인 통치기반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 연합(coalition)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 국가는 기업과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했으며 정책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했다. 경제기획원 수출진흥확대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등을 제도화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박정희 정부는 국제분업 구조 속에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타협하면서 경제전략을 수정하였다. 월남파병으로 안보적, 경제적 지원을 받은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한일경제협력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화학공업화의 목적으로 "1980년대 초에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상품 중에서 중화학 제품이 50%를 훨씬 더 넘게 차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화학공업 육성과 전국민적인 과학화 운동은 1980년대 1백억 달러 수출과 1천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기본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1973).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1973년부터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되는 1981년까지 중화학공업 7개 업종을 연차적으로 모두 완공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표2-2〉참조).

〈표2-2〉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

구 분	1973년 능력	1980년 목표
조강능력	100만 톤	1천만 톤
조선능력	25만 톤	500만 톤
정유시설	39만 배럴	94만 배럴
에틸렌 생산	10만 톤	80만 톤
전력 연산	380만 KW	1천만 KW
시멘트 연산	800만 톤	1,600만 톤
자동차 연산	3 만대	50만 대

출처: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서울: KDI)

석유파동에 이은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화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수출구조도 변화하여 1968년 전체 수출에서 경공업 제품이 70%를 차지했지만 1980년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이 41.8%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해외의존도를

심화시켰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은 매우 컸다. 중화학공업화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본의 성장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술, 자본, 제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구조적으로 일본과의 연계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양국 교류협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Ⅳ_한일 경제교류와 민간 경제인들의 활동

1. 한일 민간 경제인들의 교류

사실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형성이 촉발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들어 재계를 중심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당시 한국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을 뿐 아니라, 안보투쟁 이후 국내의 정치혼란을 수습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케다 하야토(池田 勇人) 내각도 한일관계 개선에 민간 경제외교를 통해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1960년 12월 17일 일한경제협회가 창설되었다. 일한경제협회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아다치 타다시(足立 正),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우에무라 코우고로(植村甲午郎) 등과 오사카의 재일교포 실업가인 서갑호(徐甲虎) 사카모토(阪本) 방적 사장, 이강우(李康友) 三亞약품공업 회장 등을 발기인으로 설립되었다. 본 협회는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에 경제시찰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시찰단을 초청하는 등 실질적인 한일 경제교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본 협회는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현재의 한일경제인회의/일한경제인회의)의 일본측 민간 참여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한경제협회는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일본무역회와 마찬가지로 일본 관료와의 밀접한 교류와 지도하에 활동하였다.

제2장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은 각료회담, 무역회담 등과 같은 정부간 협의체가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한일의원회담과 같은 정치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도 시작되었다. 이와 맞물려 민간분야에서는 해운, 무역 등 각각의 영역별로 다양한 협의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와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 이어 설립된 한일경제협회는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한일경제협회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순수한 민간경제단체로서, 지난 30년간 한일 관계가 경색과 화해의 국면을 반복하면서 변화해 오는 과정에서 꾸준히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2.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와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태동

제1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양국 대표단 기념촬영(1969, 워커힐)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인회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가 1966년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방일민간경제사절단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에 설립된 일한경제협회를 중심으로 경제계의 핵심 인사들이 참가했다. 일한경제협회는 국교정상화 이전 한국과의 민간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국교정상화 이후에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를 조직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경제인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동경제간담회는 이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는 것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방일민간경제사절단 1968.2).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는 이후 서울(1967년), 도쿄(1968년)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969년 1월에는 형식을 바꾸어 '한

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는 양국에서 경제 3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매회 150여명에 이르는 기업가가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제협력분과회, 산업기술분과회, 그리고 교역분과회 등 3개의 분과회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모두 8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합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국 경제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양국 경제인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2) 민간 베이스에 의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차관의 시행에 있어서 착수금 및 지급보증 등의 개선을 검토함과 아울러 한국의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및 신규개발산업에 대하여 양국 경제인의 자본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또 한국과 일본의 산업이 각기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국제분업을 촉진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제2차 5개년 계획 구상이 이에 부합하는 것이며 (4)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공업소유권을 보완하는 등의 수입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5)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2차 상품의 수출 특히 가공무역의 촉진이 극히 중요함에 비추어 일본측에서 기술, 관세 감면, 인력 교육 등의 협력을 확대하며, (6)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1차 산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7) 일본은 기술교육에 협력하고 시설 대여책을 연구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의 공동개척에 노력하고, (8) 한일 양국의 경제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상사입국, 체제, 과세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1967년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양국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우선 양국 경제협력 및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경제인의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고, (2) 조세협력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3) 양국 경제교류를 촉진할 전문가, 실무가가 상대국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제약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4) 또 한국이 공업소유권 제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5) 한국측이 요구하는 연수생파견, 훈련소 설치와 관련하여 프로토 타입(proto type)형 기술센터의 설립을 위해 구체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6) 무역을 촉진하기 위

해 일본 상사의 활동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고 (7) 한일교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차 산품 개발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 (8) 그리고 선박(船舶)차관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는 각각 정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하고 가까운 장래에 관련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표2-3〉 한일 · 일한 합동경제간담회 개최경과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1회	도쿄 1966.02.18 ~ 02.23	한국 37명 일본 80명	⦿ 경제협력분과회 1. 경제협력촉진에 관한 양국 당면 경제문제 2. 경제협력을 유효히 촉진할 체제 3. 다국간 경제협력 문제 ⦿ 산업기술분과회 1. 민간자본교류 촉진방안 2. 국제분업에 입각한 산업체제 조정문제 3. 기술교류 촉진방안 4. 노동력 협력문제 ⦿ 교역분과회 1. 1차산품 개발 수출문제 2. 가공무역 촉진문제 3. 해외시장 공동개척문제 4. 해운문제 5. 교역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
2회	서울 1967.03.14 ~ 03.15	한국 113명 일본 30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양국의 경제협력 분야 2. 양국협력 체제문제 3. 지역경제 협력문제 ⦿ 산업기술분과회 1. 산업별 협력 확대문제 2. 기술교류 촉진문제 3. 공업소유권 문제 4. 통신망 확대문제 ⦿ 교역분과회 1. 교역증진 2. 교역제도정책 개선문제 3. 해외진출 협력문제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3회	도쿄 1968.02.13 ~ 02.17	한국 47명 일본 62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주한 일인상사의 지위문제에 있어 적절한 과세를 부과하도록 한국측 정부에 건의 2. 선박차관은 일본 측에서 지속 노력 – 어업차관에 의한 선박건조에 대한 정부건의 ⦿ 산업기술분과회 1. 합작투자 사업 촉진을 위한 투자알선 기구 설치 2.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프로토타입 기술훈련 센터 설치 ⦿ 교역분과회 1.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차산품 수입계속 검토 – 해태수입을 6백만 속으로 증가 2. 기계, 전자 부문에 있어서 가공무역 촉진

제3회 한일 합동경제간담회에서 종래의 간담회형식의 회의를 발전시켜 상설기구로서 한일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즉 그간 3회에 걸친 간담회와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회합 및 왕래를 통하여 이미 쌓아 올린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민간경제인들 사이에 하나의 관례로 되고 있는 민간협력기구로서 상설기구인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결의에 따라 양국 관계자들은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를 준비했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측에서는 1968년 1월 8일에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일본 국내위원회인 일한경제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위원장에 경단련의 회장인 우에무라 코고로(植村 甲午郎), 고문에 전 경단련 회장인 이시자카 타이죠(石坂 泰三),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아다치 타다시(足立 正), 일본무역회 회장 이나가키 헤이타로(稻垣 平太郎), 해외경제협력기금 총재 야나기다 세이지로(柳田 誠二郎), 일본수출입은행 총재 이시다 타다시(石田 正)씨를 포함한 5명을 추대하고 122명에 달하는 위원으로써 일한경제위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측에서도 같은 해 1월 25일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합을 위한 결단식을 갖고 한국측 단장 겸 한국측 국내위원장으로서 김용완씨를 추대하고 고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두병씨,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활씨,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홍재선씨 등 3명을 추대하여 한국대표단을 결성하였다. 한편 한일 양국 국내위원

제2장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회는 각각 합동위원회 회의의 기초가 될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규약을 채택하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해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회 한일 · 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측의 경우 일한경제협회가 제1회 회의부터 일관되게 사무국 업무를 맡아 왔으나 한국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2년씩 교대로 맡아 오다가 1981년 2월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되면서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운영 사무국이 되었다.

그 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1998년 제30회 합동회의(일본 미야자키)부터 회의명칭을 '한일 · 일한경제인회의'로 변경하였으며, 제39회 회의(한국 부산)부터 한국측에서는 한일경제인회의로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인회의로 명칭을 단순화하여 개최해오고 있다.

1969년 이후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협력, 기술협력, 그리고 무역협력 등 한일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경제협력 문제에서는 주로 상업차관, 민간차관 등 일본의 대한 자본투자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은 수출산업 지원, 새마을사업, 서울지하철, 종합제철 사업에 지원되었다. 기술협력 부문에서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하여 1974년 발효하였고, 통상해운협정의 체결을 조선차관과 연계하도록 합의하여 각국 정부에 건의하고 결실을 보았다.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특혜관세제도의 한국 적용, 관세인하, 수입제한품목의 축소, 가공재 수입원자재 부분관세경감 등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점진적인 추가조치가 이루어졌다. 양국 무역 확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여 이를 양국 정부의 무역정책으로 반영하였다. 한일 기업 간 협의체로서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는 민간차원의 효과적인 협의 채널로써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간 정책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며, 교류의 실질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2-4〉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규약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規約

1969年 1月 29日 制定

1. 組　　織

(1) 韓日 民間經濟界의 連絡, 協議機關으로서 韓日 兩國에 各己 民間經濟人으로서 組織하는 韓日經濟委員會, 日韓經濟委員會(以下 各國內委員會라 稱함)를 設置한다.
(2) 各 國內委員會는 本 規約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自由로이 構成, 運營方法을 定할 수 있다.
(3) 各 國內委員會에는 各己 委員長을 둔다.
國內委員會 委員長은 國內委員會를 代表한다.
(4) 兩 國內委員會는 兩國間의 貿易, 技術協力, 經濟協力等 經濟交流의 促進에 關한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年 1回, 또는 相互合意에 따라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以下 合同委員會 會議라 稱함)를 開催한다.

(5) 合同委員會 會議는 原則的으로 各己 國內委員會에서 選出된 同數의 代表者로써 構成한다.
代表者의 數는 各己 40名 以內로 한다. 다만 相對國側의 承認을 얻어 適宜 이를 增員할 수 있다.

2. 各 國內委員會의 目的과 活動

(1) 各 國內委員會는 韓日經濟界의 相互理解와 親善을 增進하며, 兩國間의 貿易, 經濟協力, 技術協力等 經濟交流의 促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前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各 國內委員會는 다음의 活動을 한다.
가. 兩國間의 貿易, 技術協力, 經濟協力等 經濟交流의 促進에 關한 情報資料 및 意見을 交換한다.
나. 各 國內委員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兩 國內委員會의 合同會議를 開催

하고 兩國間 經濟交流의 促進을 圖謀한다.
다. 合同委員會 會議開催를 準備하며 必要한 連絡을 한다.
라.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合意를 본 事項을 各己 自國 政府에 對하여 國內委員會 名義로 必要한 建議를 한다.
마. 各 國內委員會는 分科會, 小委員會, 專門委員會等을 둘 수 있다.
바. 各 國內委員會는 實業人, 技術者 및 使節團의 派遣과 接受에 協力한다.
사. 其他 各 國內委員會 目的의 範圍內에서 必要한 活動을 한다.

3.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運營

(1) 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原則的으로 交代로 兩國內에서 開催한다.
(2) 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決議는 滿場一致로 한다.

(3) 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議長은 主催國, 副議長은 相對國의 代表中에서 選任한다.
(4) 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必要에 따라 會議의 分科會等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의 議長, 副議長의 選任方法은 前項에 準한다.
(5) 合同經濟委員會 會議開催의 期日, 期間, 議題, 其他 開催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細目은 原則的으로 兩 國內委員會의 同意에 따라 미리 決定되는 것으로 한다.

4. 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經費

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開催 및 運營에 所要되는 諸經費는 主催國側의 負擔으로 하고 相對國側 代表의 旅費, 滯在費等은 相對國側 負擔으로 한다.

5. 事 務 局

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各 國內委員會에 各己 事務局을 둔다.
事務局에 關한 規程은 各 國內委員會에서 이를 定한다.

〈표2-5〉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개최 1969~1980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1회	서울 1969.01.27 ~ 01.29	한국 123명 일본 39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직접합작투자촉진 구체화 방안 2. 농수산, 해운 개발 협력 3. 사회간접자본 개발 협력 4. 투자환경 정비 ⦿ 산업기술분과회 1. 기술연수생 파견과 교육 2. 경영협력 확대 및 경영지도 방안 3. 민간 기술교류 촉진방안 ⦿ 무역분과회 1. 무역 불균형 시정 2. 무역증진 3. 정책 및 제도개선 등
2회	도쿄 1970.05.14 ~ 05.16	한국 48명 일본 61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양국의 경제상황 검토 2. 직접, 합병 및 기계공업 분야 직접투자 협력 3. 경제협력추진 전문기구 설치 ⦿ 산업기술분과회 1. 조선, 기계, 금속 공업의 분업체계 확립 2. 기술교류촉진을 위한 기술연수생 파견, 훈련 3. 기술도입 필요 업종 ⦿ 무역분과회 1. 관세, 가공무역 부문의 정부제도 개선 2. 민간 베이스 무역협력
3회	서울 1971.03.02 ~ 03.04	한국 70명 일본 35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업종별 투자유치 조사단 설치 2. 투자 유치를 위한 합병금융기관 설치 ⦿ 산업기술분과회 1. 산업구조 재편성과 일본의 협력 2. 경영기술 협력 방안 3. 업종별 협력위원회 설치 ⦿ 무역분과회 1. 관세, 가공무역 부문의 정부제도 개선 2. 민간 베이스 무역협력 방안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4회	도쿄 1972.03.02 ~ 04.04	한국 22명 일본 36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민간 협력 2. 한일합병투자금융기관 설립 ⦿ 산업기술분과회 1. 한국의 기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공업소유권 문제 2. 한국의 기계공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무역분과회 1. 한일 무역확대 방안 2. 국제정세와 무역협력 방안
5회	서울 1973.03.06 ~ 03.08	한국 55명 일본 35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협력방안 2. 새마을사업 부문 협력 방안 ⦿ 산업기술분과회 1. 합병투자에 대한 기술협력 촉진 2.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협력 3. 산업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협력 ⦿ 무역분과회 1.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민간 베이스 경제협력
6회	도쿄 1974.02.28 ~ 03.02	한국 50명 일본 47명	⦿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계획에 따른 민간협력 ⦿ 한일기술협력의 발효 및 양국 기술협력 방향 ⦿ 한일 직접, 합병투자사업 관련 제문제 ⦿ 교역 증진과 원자재 확보 방안
7회	서울 1975.06.11 ~ 06.13	한국 65명 일본 29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새로운 한일협력 2. 중화학 특히 기계공업 발전 방안 ⦿ 산업기술분과회 1. 한일 분업관계 개선방안 2. 기술이전 센터의 설립 관련 3.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무역분과회 1. 수입제한조치 완화를 위한 협력 2. 통상해운협력 체결 방안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8회	도쿄 1976.03.09 ~ 03.11	한국 45명 일본 48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자본협력 2. 한국의 종합금융회사 설립 관련 ⦿ 산업기술분과회 1. 직접 및 합병투자 협력 관련 문제 2. 투자보호협력 관련 3. 산업기술협력 관련 사업의 제문제 ⦿ 무역분과회 1.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양국 협력 2. 무역제한조치폐지 및 특혜관세 확대 3. 해운협정 관련
9회	서울 1977.03.10 ~ 03.12	한국 79명 일본 28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양국 협력 2. 기계, 전자, 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발전 3.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 산업기술분과회 1. 투자기술협력 관련 제문제 2. 종합기술협력 기구의 설치 ⦿ 무역분과회 1. 무역확대균형 제약요인의 제거 2. 협력수출 및 무역균형을 위한 제언
10회	도쿄 1978.03.07 ~ 03.09	한국 40명 일본 44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자본협력 2. 한국의 종합금융회사 설립 관련 ⦿ 산업기술분과회 1. 직접 및 합병투자 협력 관련 문제 2. 투자보호협력 관련 3. 산업기술협력 관련 사업의 제문제 ⦿ 무역분과회 1.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양국 협력 2. 무역제한조치폐지 및 특혜관세 확대 3. 해운협정 관련
11회	서울 1979.04.02 ~ 04.04	한국 65명 일본 39명	⦿ 기계공업개발협력전문위원회 보고 ⦿ 대형장기기술개발연구의 협력 ⦿ 기술이전과 관련한 문제 ⦿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 보고

제3장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제3장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1980년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신시대였다. 국교정상화 이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과 회담이 개최되었고, 경제협력 차관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한일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1981년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경우 일한경제협회가 1960년에 설립되어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를 주도해 왔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일본에 대한 경협차관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일 경제협력 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한일경제협회 창립에 뜻을 모으고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1980년대 신한일관계를 개척하였다.

Ⅰ_한일 경제협력의 전환

1980년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이다. 1982년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 수상이 취임하였고, 1983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일 신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카소네 수상은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던 경제협력 차관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한일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나카소네 수상 집권 시기는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자유화와 규제개혁을 추진한 시기이다. 1985년에는 G5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조정에 합의하여 엔고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양국 관계 변화의 상징이자 출발점은 한일경제협회가 창립된 것이다. 이전까지 한일 경제협력의 민간 창구역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의 단체가 담당해왔다. 경제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에 대한 경협차관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일경제협력 창구의 단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계는 한일경제협회 창립에 뜻을 모으고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Ⅱ_제5공화국의 출범과 한일 경제협력

1. 제5공화국의 출범과 경제정책 기조

전두환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맞추고 경제안정과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1981년까지 추진되던 중화학공업육성 중심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골자를 유지하되 과잉투자와 중복투자, 부실 차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시행되었다. 물가불안과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 등에 따라 1979년부터 중화학공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검토되었으나 10 · 26 사태로 추진되지 못했다.

1970년대 집중적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시켰으나 그 이면에 각종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중복 · 과잉투자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정부는 일단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와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기업에 의한 경제적 부담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은행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금융개혁 조치를 시행하였고,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아 기업군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시책이 성과를 거둔 1986년에는 1970년대 기계, 조선,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등 산업별로 제정된 특별법을 폐지하고 '공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공업부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2. 대일 경제외교

전두환 정부는 대일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성과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차관 협상을 성공시킨 것이다. 1980년대 한일 경제협력 차관은 한일경제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965년 국교정상화 협상의 결과 제공된 경제협력 차관에 이어 사실상 2차 대규모 경제협력 차관협상

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일 양국이 어떠한 배경에서 경협차관에 합의하게 되었는지는 1980년대 양국 경제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급격한 정치변동 가운데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에 직면하였다. 사회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경제안정과 경제발전에 전념하였다. 재정지출이 축소되고 차관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일 경제협력 차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경협차관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1981년 4월 22일이다. 당시 노신영 외교부 장관은 스노베 료조(須之部 量三)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공적 개발원조 60억 달러, 일본수출입은행 자금 40억 달러 등 총 100억 달러를 5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손기섭, 2009). 경협차관 요청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였다. 소련의 위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GDP의 6%, 국가예산의 37%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미 · 일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안보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안보경협'은 이미 전두환 대통령이 1981년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었다. 1970년대 데탕트가 종결되고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일본이 한국의 안보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것이다(경향신문, 1981.02.05). 양국 안보협력을 위한 경협 요청은 같은 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도 공식 언급되었다. 축사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한 신병현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양국의 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새로이 인식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 할 것을 요청하였다(한일경제협회, 1981).

그러나 스즈키 내각과의 협상은 난항이 계속되었다. 1981년 8월 개최된 한일외상회담에서 경협차관 제공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은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경협차관이 군사원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협상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협차관의 규모와 사업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5차 경제사회발전 11개 프로젝트에 사

용될 경협차관 35억 달러, 상품차관 25억 달러 등 총 60억 달러의 일괄타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상업차관은 거부하고 정부차관, 수출입은행 차관, 민간차관 등의 총액 40억 달러규모의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1982년 중반 양국 협상안이 타결되어 가던 무렵 역사교과서 검정파동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중단됨으로써 협상이 중단되고 말았다.

스즈키 내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역사교과서 문제로 중단되어 있던 경협차관 협상은 나카소네 수상 취임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나카소네 수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지마 류조(瀨島 龍三)를 특사로 임명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과 협상하였다. 안보목적의 원조라고 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관료와 야당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나카소네 수상의 전격적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압력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분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바 있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소련위협에 대응하여 한 · 미 · 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고 미 · 일 동맹체제의 공고화를 희망하던 나카소네 내각에게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원조가 정치적 우선사항으로 결정된 것이다.

〈표3-1〉 경제협력 차관 합의 내용

구 분	금 액	국내자금	공여기간	평균금리
ODA(엔차관)	18.5억 달러	30%	7년	6%
수출입은행 융자	21.5억 달러	15%		

최종 합의된 경제협력 차관의 규모는 40억 달러였다. 이중 18.5억 달러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이었고 21.5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융자(JEXIM)로 각각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연차별로 매년 집행하되 국내 자금의 투입비율을 규정하여 상호협력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한일경협차관은 전두환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교육, 병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개발에 집중투자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에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차관 도입액

은 272억 6200만 엔으로 영산강 방조제사업 4,440 백만엔,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4,440 백만엔, 3단계 교육시설 확충사업 5,920 백만엔, 사립대 부속병원 확충사업 5,624 백만엔, 연구소 시설보강 사업 2,679 백만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4,159 백만엔 등이 지출되었다 (국가기록원). 1988년 공여된 차관의 경우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4.25% 였다.

Ⅲ_한일경제협회의 창립

1. 한일경제협회 창립 과정

이처럼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일 협력창구의 체계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간에는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협의체가 제도화 되었다. 당시 민간 차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것은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였다. 1969년에 시작된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한국측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3경제단체가 2년씩 순번제로 맡고 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1960년에 설립된 일한경제협회가 한일경제협력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일 협력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제기되면서 1981년 2월 4일 상기 3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대표들이 모여 발기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원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유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박태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발기인 회의에서는 박태준 사장을 대표로 선임하였다.

이어 1981년 2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및 업계대표 150인이 참석하여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1981년 사업계

획을 확정 지었으며 2월 23일 법령에 따른 정부승인을 받고 법원등기를 마쳤다. 창립 당시 한일경제협회 사무실은 충무로 극동빌딩에 위치했다.

〈표3-2〉 한일경제협회 설치 연혁

일 시	내 용
1981.02.04	발기인회 개최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원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유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박태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사장)
1981.02.12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및 업계대표 150인이 참석하여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창립에 동의하고 정관채택, 임원선출, 사업계획 확정
1981.02.23	경제기획원 법인설립 인가(경제기획원 승인 제40호)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인등기 (제1866호)
1981.02.26	한일경제협회 사무국 개설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24층 2405-6호

2. 한일경제협회의 조직과 임원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경제 3단체장이 아닌 박태준 사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박태준 회장의 역량과 인맥 때문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1968년 포항제철이 설립된 이후 초대 사장으로 부임하여 포항제철을 세계1위의 철강기업으로 키워낸 한국의 카네기(Andrew Carnegie)와 같은 인물이었다. 포항제철은 1973년 103만 톤의 생산시설을 준공한 이래 1981년 2월에는 4기 설비를 준공하여 연간 조강능력을 850만 톤으로 늘렸다. 포항제철의 설비, 기술 및 자본 도입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했고 박태준 회장은 한일협력에 있어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3장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1981.2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포항종합제철 박태준 사장

박태준 회장은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어려서 일본으로 건너가 교육받고 성장했다. 1945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육사를 졸업하였다. 한일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한일경제협회 초대 회장으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이 선임된 것은 한일 신 시대를 개척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한일경제협회의 고문 및 부회장, 이사에는 당시 한국재계의 중요 인사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한일 경제협력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표3-3〉 한일경제협회 임원명단(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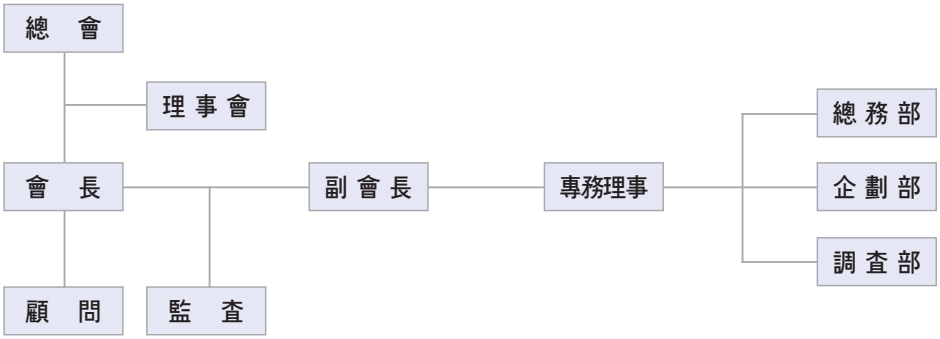
任 員 名 單

〈가나다順〉

會 長	朴泰俊							
顧 問	金元基	金永善	金容完	柳琦諄	劉彰順	李秉喆	鄭壽昌	鄭周永
副會長	金宇中	朴大振	朴龍學	李健熙	李孟基	鄭世永	鄭寅旭	鄭春澤
〃	趙重勳	許愼九						
監 事	金萬重	禹容海						
事務理事	李尙秀							
理 事	姜晋求	姜信浩	高應振	具滋暻	金基鐸	金命年	金鳳鶴	金相廈
〃	金相汶	金錫元	金連珪	金禹根	尹泰葉	金鍾大	金鎭河	金昌圭
〃	金八淑	金翰壽	金炯德	羅翼鎭	閔錫源	朴南奎	朴三求	朴容旿
〃	朴允甲	朴宗華	徐成煥	辛格浩	朴健培	薛元亮	孫尙模	柳纘佑
〃	辛俊浩	尹錫民	尹柱元	李相喆	李洙彬	李昇柱	李殷澤	蔡福基
〃	李種根	李埈鎔	李載沆	李春林	李忠善	李勳東	洪鍊錫	張炳贊
〃	張相泰	張盛煥	張致赫	全仲潤	鄭相溶	趙錫來	趙鼎九	朱昌均
〃	崔鍾賢	韓在烈						

한일경제협회는 재계 중요인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무이사 및 총무부, 기획부, 조사부를 두었다. 정관에는 협회 설립의 목적이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며, 특히 양국 경제의 제휴를 도모함으로써 상호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중요 사업으로는 (1)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 교환, (2) 양국 경제제휴에 관한 정책입안, (3)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개최, (4) 양국 간 민간경제 및 통상 사절단의 파견 · 영접 및 실업인, 기술자, 전문가 등의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외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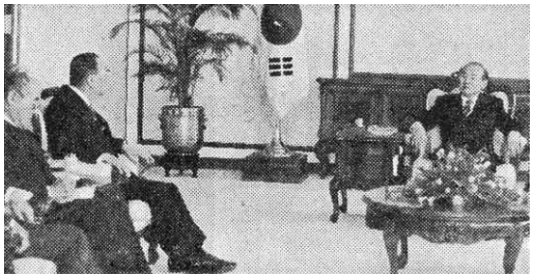
〈도표3-1〉 설립 당시 조직도



1980년대 한일경제협회의 설립과 더불어 양국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한일경제협회를 통한 협력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직접 중요 현안에 합의함으로써 협력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다. 1970년대의 양국 협력은 대체로 자본투자 및 기술제공에 집중되었다. 반면 1980년대는 기술이전, 무역역조 개선, 인적 교류 등에 대한 협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 이로써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양국 관계에 있어서 현안이 되어오던 중요 경제문제에 대한 협력이 심화될 수 있었다.

Ⅳ_한일 신 시대와 경제협력의 전개

1. 한일 신 시대의 전개


全大統領, 日本 對韓輸入촉진단 대표 접견

1980년대는 양국 지도자들의 적극적 의지로 한일 관계의 신 시대가 개막된 시기이다.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집권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983년 1월에는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이자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일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경축하기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나카소네 총리는 1983년 1월 11일 방한하여 11일과 12일 두 차례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한·일 정상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을 교섭하고 현안 이슈로 논의되던 40억 달러 경협차관 제공문제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는 정치, 경제, 안보협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1983년의 정상회담이 1965년의 국교정상화에 이어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 간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 하였다. 제3항에서는 한일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추구하는 '인방(隣邦)'라는 전제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제4항에서는 한·일 양국이 이 지역의 평

화 · 안정 · 번영을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제8항에서 일본의 경제협력 기본 방침 아래 가능한 확대하고, 제9항은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은 동반자적 협력차원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12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에 합의하였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1984년 9월 6일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방일기간 히로히토(裕仁) 일본 국왕을 방문하였고 히로히토 국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나카소네 총리는 전대통령 내외를 초청하여 총리 가족들과 오찬을 나누었고 이례적으로 다시 영빈관까지 찾아와 전대통령에게 작별인사를 함으로써 각별한 예우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공동성명의 제3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한 · 일 양국 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양국이 성숙한 우방으로서 영원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함으로써 '한일 신 시대' 의 시작으로 평가 받았다. 공동성명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와 국제정세에 대해 두 정상은 거의 같은 인식을 공유하며 그 위에 양국 관계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추구와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정립에 두어 새로운 한 · 일관계의 미래를 구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북한의 폭력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는 일방적인 대북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언하여 북한의 대일 접근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돼 왔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공동성명 9항),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7항), 첨단기술 이전(7항), 문화교류(8항)문제 등에도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 번째 양국 정상회담은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나카소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박2일 일정으로 9월 20일 방한한 나카소네 총리는 21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독회담

을 통해 양국 정상은 소련의 적극적인 對 아시아 · 태평양 진출정책과 소련 ·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처우 및 지문날인 관련 제도의 개선계획에 대한 나카소네 총리의 설명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한일 무역역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양국 청소년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데 합의하여 5년간 5백 명의 한국 청소년을 일본에 초청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일경제협회의 활동

수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 부문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1981년 한일경제협회가 창립되어 대일 경제협력의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될 수 있었다. 또, 구체적인 실행기구로써 한일경제협회의 활발한 활동은 양국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같은 다양한 경제협력의 성과는 기술협력, 무역촉진,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개최

기술이전 문제는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첨단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적인 산업구조상의 여건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양국 정상 간에 기술이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1980년대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와 4개의 전문위원회에서 공통적으

로 논의된 핵심 의제중의 하나는 기술이전 문제였다.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일본의 첨단기술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소재에 대한 공동개발의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1982년에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 · 중소기업협력위원회가 네 번째 전문위원회로 발족했다. 일본의 중소기업협력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하였고(1982년), 1986년 양국 정상이 기술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1986년부터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목록 100개를 한국에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하였다.

한일경제협회 창립후 첫회의인
제13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한일 양국의 장기협력과제를 협의하는
장기구상연구위원회 회의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3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서울, 1981년 6월10일~12일) 회의에서 특히 양국 경제인은 한국측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일본 대표단은 제5공화국 출범에 따라 한국의 정치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경제상황도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 한편 양국 대표단은 국제경제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및 아시아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양국 민간경제협력의 당면 과제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측면에서 양국이 기술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제한조건이 없도록 할 것과 일본의 첨단기술 이전 특히 전자공업 분야의 기술이전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한국측이 제안하였다.

그 다음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4회 회의에서 한국측은 양국 정부 간에 협상중인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경제협력 현안문제가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본 계획의 순조로운 진전이 양국 간의 민간경제협력 촉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이러한 한국측의 요망을 신속히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중견 · 중소기업 기술협력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한국측은 한국 기술자의 일본내 훈련실시와 한국내 훈련을 위한 요원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중견 ·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시킬 것에 동의하였다.

1983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회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수상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이 있은 뒤 가진 첫 번째 회의였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계의 관심사인 경제협력 및 기술이전의 확대와 무역증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양국 대표단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의 건전한 경제발전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 환태평양 국가들의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본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측은 일본의 대한기술협력이 일본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양국의 무역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일본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측은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일본의 현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술협력촉진을 위해서는 한국측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환경조성이 강구되어야 하며 양국 간 상호신뢰 증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84년 4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6회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20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민간의 경제 ·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 성의 있는 상호협력 및 국민적 기반 위에 선 상호이해를 가일층 촉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한일경제교류의 원점' 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전후 세대가 인구의 70%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경제협력도 젊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주적으로 기술수준을 제고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젊은 연구자 등의 인재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측

은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한일경제협력'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뉴미디어의 등장 등 정보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한일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 행사준비위원회를 양국 한일 · 일한경제협회 안에 설치하자는 제안이 한국측으로부터 있었으며, 이에 일본측은 민관협동으로 이미 발족된 기념행사간담회와의 조정을 거쳐 조속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17회 회의는 처음으로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는 공통의 이해에 입각하여 무역의 확대균형, 기술교류 촉진, 범국민적 신뢰관계 강화를 위한 인재교류 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대일수출촉진단의 파견, 일본으로부터의 대한투자조사단의 파견, 청소년교류 등의 실시에 대하여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1986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8회 회의는 일한경제협회 설립 25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임원 체제하에서 사단법인화를 실현한 뒤 처음 맞는 합동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축하의 뜻이 표명되었고, 일본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조사단 파견, 방일투자유치단 파견, 부품개발협력단 교류, 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청소년교류, 서울올림픽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 등이다. 특히 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1964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이 그 이후의 일본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 된 경험에 비추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1990년대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기대하여 양측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양 협회 사무국에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한국측은 현재 외자도입규제 완화, 수입 자유화, 시장개방 등 획기적인 개방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종래의 원세트(One Set,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국내에 갖추고 있음)주의를 바꾸어 한국과의 국제적인 수평분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다른 나라의 번영 없이는 일본의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번영도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의 국제정세 하에서 일본경제는 적극적인 산업조정을 추진하여 국제협력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한일경제관계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양국 간의 수평분업을 가속화시켜 보다 바람직스러운 경쟁적 협조관계를 만들게 되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9회 회의는 1987년 4월 제주도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합동분과회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총3개의 분과회를 통해 많은 제안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1분과회에서는 우선 엔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조정의 일환으로 국제분업을 촉진시키고 있는 일본은 제품생산국으로부터 제품개발국 즉 기술수출국으로 이행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제품생산국과의 산업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효과적인 한일 산업협력을 통하여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무역구조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공통인식 아래 쌍방에서 투자 ·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분과회에서는 한국이 무역불균형 시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바탕으로 확대균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제3분과회에서는 1986년 10월 일한경제협회가 파견한 '방한부품개발협력밋션'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부품개발협력촉진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해운협력의 증진 및 인적교류 확대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제19회 합동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부인들도 참가하여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는 회의가 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부인동반 참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양국 경제인 간의 친선유지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있다.

〈표3-4〉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요약 1982~1987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13회	서울 1981.06.10 ~ 06.12	한국102명 일본 66명	⊙ 경제협력분과회 1.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구상 2. 장기대형기술개발전문기구 설치추진 3. 경제협력장기구상연구위원회 설치 합의 4.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 산업기술분과회 1. 기술협력의 제약요건 해소 2. 전자공업분야 기술협력 방안 ⊙ 무역분과회 1. 특혜관세제외에 따른 섬유, 직물 제외방안 2. 일본 상사의 법적 지위 향상	⊙ 제6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장기대형기술개발 기구 설치(안) ⊙ 제8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설치(안) 합의 ⊙ 일본의 대한수입촉진단 방한
14회	도쿄 1982.04.13 ~ 04.15	한국 60명 일본 67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2. 경제협력장기구상위원회 개최보고 ⊙ 산업기술분과회 1.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2. 첨단대형복합기술 공동개발 3. 한국 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 무역분과회 1.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민간 베이스 경제협력	⊙ 제1회 경제협력장기구상위원회 ⊙ 제2회 경제협력장기구상위원회 ⊙ 제7회 기계공업협력전문위원회 ⊙ 제9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15회	서울 1983.04.06 ~ 04.08	한국 97명 일본 71명	⊙ 무역확대균형전문위원회 1. 무역 개방과 한국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 기계공업협력전문위원회 1. 투자조사단 파견, 제3국에 공동 플랜트 수출 2. 첨단기술이전 ⊙ 경제협력장기구상위원회 : 양국 경제전망 ⊙ 중견 ·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1. 구매조사단의 상호파견 2. 한일 중소기업간 합작투자, 정보제공 등	⊙ 제8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0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3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1회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 대한투자조사단 방한
16회	교토 1984.04.05 ~ 04.07	한국 63명 일본 88명	⊙ 무역확대균형전문위원회 ⊙ 기계공업협력전문위원회 ⊙ 경제협력장기구상위원회 ⊙ 중견 ·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 기능공 및 기술자 연구, 기술협력실무위원회 설치	⊙ 제9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1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4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2회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 첨단기술이전 정보교환 및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 기술자 연수 방일 협의
17회	경주 1985.04.10 ~ 04.12	한국 77명 일본 68명	⊙ 기술자 연수 등 기술이전 협력 증진 ⊙ 수출 및 수입 증대를 위한 협력 강화 ⊙ 기술협력 연수인력의 증대	⊙ 제10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2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5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3회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 일본 한국기술자 수용협의회 발족 ⊙ 한국 수출촉진단 39명 방일 ⊙ 일본 수입촉진단 144명 방한 ⊙ 양국 시장협의회 결성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18회	도쿄 1986.04.09 ~ 04.11	한국 64명 일본 82명	⊙ 6차 사회경제개발5개년 계획 조사단 파견 ⊙ 대한투자촉진단 방일, 투자 촉진단 방한 ⊙ 부품개발협력단 교류를 위한 조사단 방한 ⊙ 청소년 교류 확대	⊙ 제11회 기계공업협력 전문 위원회 ⊙ 제13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6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4회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 일본 수입촉진단 25명 방한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14명 ⊙ 200여명의 한국 수출촉진단 방일
19회	제주도 1987.04.20 ~ 04.21	한국 116명 일본 110명	⊙ 한일투자기술협력 방안 ⊙ 한일 양국 간 무역확대 및 환경개선 방안 ⊙ 방한국 부품개발 협력 및 미션 활동 보고	⊙ 제12회 기계공업협력 전문 위원회 ⊙ 제14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7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5회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 ⊙ 방일 투자유치단의 파견 ⊙ 방일수출촉진단 파견 ⊙ 청소년교류의 파견 및 수용 ⊙ 한일 기술이전세미나 개최 ⊙ 방일 부품개발협력 미션파견 ⊙ 방한 중소기업협력 미션수용

(2) 한일부품개발협력

1986년 4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8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부품개발협력파견단 교환에 합의하여, 일본측은 먼저 198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파견단을 한국으로 보냈으며, 한국측은 이듬해인 1987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파견단을 일본으로 보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상호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위해 꾸준히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실은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

나 무역에 있어서만은 양국관계자들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무역불균형이 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불균형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무역불균형은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도 상호보완적인 국제분업을 통한 산업협력의 증진이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이 양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한편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에 따른 지속된 엔고 현상은 일본으로 하여금 산업구조의 변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생산거점의 확보 내지는 부품·소재의 해외조달의 필요성을 높였다. 또한 한국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산업고도화를 이룩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호관계에 비추어 양국 부품산업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여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상대국의 부품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양국 경제계가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3) 대일 수출촉진단 파견

한일시장협의회 신년인사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일 경제관계의 큰 현안이었던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조직화되고 구체화 되었다. 1984년 4월 쿄토(京都)에서 개최된 제16회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방한국 수입등 촉진미션'이 방한(일본측 단장 : 松尾泰一郎 마루베니 회장/ '84.10. 8개그룹 144명)하였다. 이를 계기

로 조성된 무역역조 시정 노력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대일수출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측은 한일경제협회 주관 하에 경제4단체 및 업종별 조합·종합상사·1,600여개 대일수출상담추진업체가 참여하는 '한일시장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진호 상공부 장관, 경제4단체장,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은 신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박용학 대농그룹 회장을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한일시장협의회(사무국 : 한일경제협회)를 1984년 12월에 발족시켰다. 일본측도 일본무역진흥회(JETRO) 주관으로 '일한시장협의회(사무국 : JETRO 수입촉진부)'를 1985년 2월에 설치하였다.

〈표3-5〉 한일시장협의회 임원구성

구 분	성 명
고 문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회장/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남덕우 한국무역협회 회장 유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한봉수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회장	박용학 한일경제협회 부회장(대농그룹 회장)
부회장	강진구 전자공업진흥회 회장/구자학 합성수지제품수출조합 이사장 김주남 기계공업진흥회 회장/노인환 전경련 상근부회장 박영욱 현대종합상사 사장/배상욱 삼성물산 사장 이경훈 대우 사장/이선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재항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헌조 럭키금성상사 사장 이상수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한재열 중소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허신구 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표3-6〉 한일시장협의회 규약

韓日市場協議會 規約

第1條(名稱) 本 協議會는 韓日市場協議會(英文名: KOREA-JAPAN MARKET COUNCIL)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 協議會는 日本의 "訪韓國輸入等促進團"訪韓으로 構成된 對韓輸入促進雰圍氣를 活性化하고, 이를 바탕으로 中長期的인 兩國貿易擴大均衡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組織) 韓日經濟協會 傘下機構로 하며 協議會內에는 다음의 8個部會를 設置 運營한다.
1) 綜合部會
2) 産業協力促進部會
3) 電子·電氣部會
4) 一般機械部會(自動車部會)
5) 纖維部會
6) 農水産部會
7) 消費財部會
8) 基礎資材部會

第4條(活動) 上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同 協議會는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1) 對日輸出促進團 派遣
2) 對韓輸入促進團 受容
3) 日本의 地方單位 購買使節團 誘致
4) 日本의 流通市場 調査, 資料蒐集
5) 日本에 我國産業과 商品弘報를 위한 活動事業
6) 兩國 産業協力(技術, 資本)促進을 위한 事業
7) 其他 兩國 貿易擴大均衡을 위한 諸般活動 및 對政府 建議

第5條(任員) 任員의 會長 및 若干名의 顧問, 副會長 및 各部會 責任幹事委員으로 한다.

第6條(選任) 任員의 人選은 韓日經濟協會 會長 推薦에 依據, 本 協議會의 承認으로 選任한다.

第7條(會員) 任員外의 構成員은 '84年以後 來韓했던 輸入促進團과 商談했던 國內企業體, 그리고 '85年以後 對日輸出促進團에 參加했던 企業體중 希望社로 構成한다.

第8條(會議) 對日貿易擴大均衡등의 諸般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全體會議와 業種別 關係者 懇談會를 必要時 開催한다.

第9條(事務局) 協議會 事務處理를 위한 事務局은 韓日經濟協會 事務局이 兼한다.
第10條(事務局 運營) 協議會 事務局 業務는 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이 管掌하며, 幹事業務는 協會 事務局長이 擔當하고 業種別部會 傘下에 團體別로 實務要員을 둔다.

第11條(事務局 機能)
1)第4條 協議會 活動事項 業務遂行
2) 韓日市場協議會의 會議 召集을 위한 連絡業務
3) 協議結果整理, 必要時 對政府 建議
4) 其他 協議會 機能에 附帶되는 業務

第12條(運營經費) 韓日市場協議會 活動을 위한 所要經費調達은 다음에 依한다.
1) 輸出特計資金 支援
2) 會員社의 一部負擔

附 則

本 規約은 1984年 12月 21日부터 施行한다.

1985.5 제1차수출촉진단 방일시 나카소네 수상을 예방해 한일협력에 관해 간담을 하는 단장단

이후 양국 기업은 한일 · 일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역확대를 위한 협의와 교류를 지속하였다. 한일시장협의회가 '방일수출촉진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일본의 지방단위 사절단 유치, 일본 유통시장 조사와 정보입수, 산업협력 촉진 등의 활동을 개시하면서 양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지방 간 교류에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박용학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직접 대일 수출촉진단에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방문 기간 중 현지 지사와 시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현청, 시청, 상공회의소, JETRO 등 주요 기관을 예방하여 한국상품에 대한 구매요청과 투자유치활동을 주관하였다.

수출촉진단 활동은 대일 수출증대와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수출촉진단 파견을 통해 자체적으로 일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무역불균형 문제의 개선에 기여했다. 둘째,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역간 산업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본 지방도시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우수상품 발굴을 통하여 대일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고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다.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표3-7〉 방일수출촉진단 파견실적

년 도	파견회수	규 모	방문도시 수	상담건수
1984	'84.7 22개사 39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설명단의 일본 8개도시 순회 설명회			
1985	4회	225개사(347명)	연 23개도시	3,285건
1986	6회	208개사(287명)	연 21개도시	2,815건
1987	8회	262개사(363명)	연 26개도시	3,169건
1988	5회	216개사(306명)	연 18개도시	3,656건
1989	5회	286개사(389명)	연 22개도시	3,704건
1990	5회	187개사(255명)	연 18개도시	2,077건
1991	5회	207개사(286명)	연 16개도시	1,248건
1992	4회	140개사(197명)	연 10개도시	720건
1993	5회	120개사(164명)	연 15개도시	901건
1994	3회	106개사(147명)	연 8개도시	795건
1995	2회	53개사(74명)	연 6개도시	764건
1996	3회	73개사(107명)	연 9개도시	784건
1997	2회	63개사(93명)	연 5개도시	516건
1998	3회	96개사(135명)	연 7개도시	917건
1999	3회	65개사(99명)	연 5개도시	1,033건
2000	2회	56개사(84명)	연 4개도시	463건
2001	2회	58개사(83명)	연 4개도시	540건
2002	2회	58개사(87명)	연 4개도시	495건
2003	2회	54개사(91명)	연 4개도시	465건
2004	1회	27개사(40명)	연 2개도시	170건
2005	2회	20개사(33명)	연 2개도시	133건
2006	2회	25개사(34명)	연 2개도시	134건
총 계	76회	2,605개사(3,701명)	연 231개도시	28,784건

방문도시(일본전국 38개 도시)

도쿄/오사카/나고야/고베/요코하마/후쿠이/카나자와/토야마/니가타/하마마츠/센다이/아오모리/삿뽀로/오카야마/히로시마/키타큐슈/마츠야마/고오치/타카마츠/시모노세키/후쿠오카/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카고시마/마쓰모토/야마가타/기후/시즈오카/오키나와/아키타/도쿠시마/사가/모리오카/마쓰에/코오리야마/돗토리/치바

그러나 양국 간 교역촉진을 위한 조사단을 상호 교환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불균형 문제는 계속되었다. 더구나 시장개방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일본 의존적 수출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확대라는 1차적 조치 이외 기술이전, 기술개발 협력 등의 적극적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후 지속되었다.

(4) 인적교류

인적 교류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였으며, 그 1차적인 이유는 기술이전과 교육을 위해서였다. 한국의 기능인력이 일본의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양국 정상은 1984년 양국 기능인력 교류에 합의하였고 한일경제협회는 이를 적극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술자의 일본 연수를 담당할 기관으로 수용협의회(受容協議會)를 설치했다. 수용협의회는 외무성, 통산성, 운수성, JICA, AOTS, 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일한경제협회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일한경제협회는 경단련과 협력하여 여러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기술연수생을 받아들이도록 협력했다. 1984년 11월 첫해 총 31명이 17개의 일본기업에 배속되어 연수를 실시했다. 첫해의 성과가 매우 좋게 평가됨에 따라 이후 연수인원을 늘려 지속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미래 한일관계를 위한 인력교류도 적극 실시되었다. 한일 국교수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984년 제16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대학생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청소년 교류사업이 논의된 것은 한일국교정상화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제1회 개최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자 1986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4년까지 대학생 교류사업에는 한국 대학생 803명, 일본 대학생 446명이 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친교에 참여하였다.

〈표3-8〉 한국대학생 방일단 파견

회	연도	한국학생	방문지역	산업견학	기타
1	1985	44	도쿄	EXPO85, 닛산자동차, 아사히 신문	
2	1986	50	도쿄	닛산자동차, 도시바 · 전기통신과학관, NHK방송센터, 야마이치컴퓨터센터	
3	1987	44	오사카, 나라, 도쿄	닛산자동차, 도시바	
4	1988	53	오사카, 나라, 오카야마, 도쿄	도쿄증권거래소, 산요증권, 후지츠, 삿포로맥주	
5	1989	50	오사카, 교토, 오카야마, 도쿄	도쿄증권거래소, 요미우리신문, 도쿄유통센터, JFE스틸동일본제철소	
6	1990	49	오사카, 교토, 오카야마, 도쿄	닛산자동차, NHK방송센터, 삿포로맥주	
7	1991	49	교토, 도쿄	도쿄증권거래소, 삿포로맥주, 닛산자동차, 산케이신문	
8	1992	43	교토 · 나라, 도쿄	닛산자동차, 삿포로맥주	세미나
9	1993	45	교토 · 나라, 도쿄	닛산자동차, 삿포로맥주	세미나
10	1994	40	교토 · 나라, 도쿄	닛산자동차, 도쿄증권거래소, 삿포로맥주	세미나
11	1995	39	도쿄, 하코네, 요코하마	도요타자동차, 삿포로맥주, 미츠비시	
12	1996	40	오카야마, 히로시마,도쿄	마츠다자동차, NHK방송센터, 유통센터	
13	1997	40	교토 · 나라, 나고야, 도쿄	도요타자동차	
14	1998	40	교토 · 나라, 나고야, 도쿄	도요타자동차, 산업기술기념관	
15	1999	32	교토, 도쿄	도시바과학관	
16	2000	31	교토, 나고야, 도쿄	도요타자동차, 산업기술기념관	
17	2001	30	오사카, 교토, 도쿄	도요타자동차, 도요타회관	
18	2002	29	오사카, 나라, 교토	닛산자동차, 아사히맥주	
19	2003	30	오사카, 교토, 하코네	아사히맥주	
20	2004	25	도쿄, 하코네	아사히맥주	
총계		803			

〈표3-9〉 일본대학생 방한단 수용

회	연도	일본학생	방문지역	산업견학	기타
1	1988	39	서울, 포항	한국방송공사, 대우자동차,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고려대, 포항공대
2	1989	30	경주, 서울, 대전,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연세대, 주한일본대사관
3	1990	33	경주, 서울, 수원	삼성전자	판문점, 연세대, 주한일본문화원
4	1991	25	경주, 서울, 수원, 포항	삼성전자	판문점, 포항공대
5	1992	33	경주, 서울, 대전,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6	1993	32	경주, 서울, 수원, 대전, 포항	포항종합제철, 삼성전자	판문점, 포항공대
7	1994	27	경주, 서울, 수원, 포항	포항종합제철, 삼성전자	판문점, 포항공대
8	1995	22	대전, 서울, 용인, 이천	동양맥주 이천공장	판문점
9	1996	36	경주, 서울, 용인,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10	1997	28	경주, 서울, 용인,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11	1998	21	경주, 서울, 용인,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12	1999	20	경주, 부산, 서울,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13	2000	21	경주, 서울,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14	2001	21	경주, 서울, 포항	포항종합제철	판문점
15	2002	27	경주, 서울, 포항	POSCO(포항제철)	판문점
16	2003	18	경주, 서울, 포항	POSCO(포항제철)	판문점
17	2004	13	서울, 수원, 천안	삼성전자 홍보관	판문점
총계		446			

Ⅴ_소결: 대일 경제협력 창구의 일원화와 민간경제협력

1981년 2월 한일경제협회가 창립되어 한일 교류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일경제협회가 1981년 창립된 것은 양국의 정치 및 경제의 변화라는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5공화국 정부는 대일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안정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던 전두환 정부에게 일본과의 경협은 매우 중요했다. 한국측의 경협차관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나카소네 수상이 취임한 이후 전격적으로 바뀌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수상은 경제협력 차관 40억불 제공에 합의하고 이를 계기로 수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신시대를 개척하였다.

한일경제협회는 한일 신 시대의 시작점이자 주체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일 경제협력의 창구가 일원화 됨에 따라 여러 협력의 의제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었다. 한일경제협회는 단지 양국 관계의 매개자로써의 역할을 넘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협력의 의제와 정책을 구체화함은 물론 이를 직접 실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기술협력, 무역촉진 및 인적 교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경제협력의 현안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이후 한일경제협회의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었다.

제4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제4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탈냉전과 민주화가 심화된 1990년대는 한일 양국에 있어 변화와 개혁의 시대였다. 경제적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정치변동을 가속화 시켰고, 정치적 변동은 다시 경제개혁을 촉진시켰다. 1980년대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투자와 지출을 확대했고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저성장의 위기가 1990년 내내 지속되었다. 경제실책을 이유로 내각이 자주 교체되었고 일본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개혁의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도 경제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0년대 양국 경제협력은 국내적 경제위기와 대외적 경제환경의 변화가운데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시작된 한국의 핵심 산업이 성숙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구조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개방화, 세계화 등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심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기술이전이나 직접투자의 확대 노력이 구체화되었고 부품 및 소재 부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증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을 심화시켜 무역역조가 확대되었고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했다. 한일경제협회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양국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는 핵심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Ⅰ_새로운 세계질서와 한일 경제협력

1980년대 말부터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 역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었다. 냉전 질서의 붕괴는 정치적 민주화와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경제적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정치변동을 가속화 시켰고, 정치적 변동은 다시 경제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세계질서의 변화는 동아시아 경제에 더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민주화, 세계화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성과가 지체되면서 양국 경제는 1990년대 공히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조적 불황을 겪게 된 것이다.

양국의 경제발전은 국가 주도의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1955

년 보수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화를 이룩한 일본은 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아시아 각국에게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자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도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주도의 산업화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양국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출주도 산업화는 국내적인 산업 불균형과 더불어 대외 무역불균형을 초래하여 무역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경제개혁이 적극 추진되었다. 일본은 1985년 G5 국가와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고 경제개혁을 가속화했다. 일본에게 1980년대는 소위 '일본모델'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다. 30년 만에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1980년대 들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엔고와 3저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산업이 급성장 했다.

그러나 시장자유화와 경제개혁은 곧 위기를 초래했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저성장의 위기가 1990년 내내 지속되었다. 경제실책을 이유로 내각이 자주 교체되었고 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진 1994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수당 자리를 내어주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1960~70년대 일본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개혁의 시기였다.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흐름 가운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개방화와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경제의 경기침체는 지속되었고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 국내적 경제위기와 대외적 경제환경의 변화가운데 양국 경제협력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양국 산업의 구조변화다. 1970년대 시작된 한국의 핵심 산업이 성숙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구조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개방화, 세계화 등을 추진하면서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시장 진출과 투

자를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심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기술이전이나 직접투자의 확대 노력이 구체화되었고 부품 및 소재 부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증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을 심화시켰고 무역역조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의제로 남게 되었다.

Ⅱ_민주화 및 세계화에 따른 경제정책과 대일 경제협력

1.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1987년 6 · 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등의 정치적 민주화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획기적 변화였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억압되었던 노동부문의 정치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나 기업의 경영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들어 민간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업 내부의 개혁도 시작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세계화의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경제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역, 외환, 금융의 자유화와 더불어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중점을 주었던 개방화와 세계화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질서 변화 때문이었다.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역 통합은 가일층 확대되었다. 1988년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이 가시화되었고 1989년에는 일본과 호주 주도로 아시아 · 태평양 경제공동체(APEC)가 제기되었다.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이후 1992년에는 유럽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이 체결되어 거대 지역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경제적 지역통합이 가속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증가했고 이는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구조적 변화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미국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철회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했다. 1992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고 단일유럽시장 선언 등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세계화의 추세가 확대되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대외환경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개방화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추진하던 대외개방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금융 및 외환부문의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금융 및 외환부문의 개방화는 1980년대 중반 무역수지 흑자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3저 호황에 의해 1986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통상마찰 방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외환 및 금융부문 개방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1988년 11월에는 경상거래에 있어서 외환거래의 규제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환율변동 폭을 완화하여 외환거래의 확대를 모색했다. 내부적으로는 증권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 외국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외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적으로 외환거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4-1〉 경상수지 및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무역수지	-0.2	42.1	76.6	114.5	46.0	020.0	-69.8
무역외수지	-14.5	-6.3	9.8	12.7	2.1	-4.5	-18.8
이전수지	5.8	-	12.2	14.5	2.4	2.7	-1.5
경상수지	-8.9	46.2	98.5	141.6	20.5	-21.8	-87.8
수출증가율(%)	0.4	28.3	36.4	29.1	3.0	2.8	10.3
수입증가율(%)	-3.3	12.3	29.9	24.9	17.9	14.7	17.6

출처: 박진근(2009), p. 318.

다음은 금융부문의 자유화 정책이다.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부문을 통제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대외개방과 자유화가 진행됨에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따라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의 회복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내적인 금융시장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외국 투자자의 국내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시장, 특히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자유화를 1996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금융시장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금융감독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확장정책은 금융부문을 부실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통상 및 무역 부문의 자유화도 적극 추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1985년 26.4%에 달했던 관세율은 1995년까지 9.8%까지 하락하였다. 수입규제에 대한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1992년 공업제품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포함한 수입규제 철폐로 705개에 달하던 규제 품목이 241개로 축소되었다. 또 1995년 5월 무역자유화는 78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추가로 철폐함으로써 관세 대상 품목의 95% 이상이 수입자유화 되었다.

개방화 정책이 외국 자본, 투자 및 물품의 국내 수용을 위한 정책이라면 세계화 정책은 대외 진출을 위한 외부지향적 특성을 가진다. 냉전 구조의 종결과 더불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구 소련과 동구권 및 제3세계와의 외교적 관계를 구축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안보적 목적과 더불어 경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특히 집권 중반 이후 소위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고 한국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표4-2〉 주체별 ·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구분	주체별			재원별		
	공공	대학	기업	공공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
1970~1975	66.0	5.1	28.9	61.9	29.9	18.3
1976~1980	58.4	8.7	33.4	52.5	46.5	1.0
1981~1985	33.6	11.0	55.2	30.0	69.3	0.7
1986~1990	20.5	9.5	69.9	18.0	82.0	0.1
1991~1995	20.5	7.2	72.3	20.3	79.6	0.2
1996~2000	16.8	10.9	72.3	28.4	71.5	0.1
2001~2008	13.4	10.3	76.2	(26.8)	(72.9)	(0.3)

※ ( )은 2008년 수치임
Source: KISTEP,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2009

개방화, 자유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금융, 투자, 기술도입 등에 있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증권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자유화 조치는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금융 비중의 변화는 정부의 간섭을 받는 은행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었다. 또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잉여이익금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4-2〉와 같은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기업비중의 증가가 대변한다. 1970년대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60% 이상을 담당했다. 1980년대부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72%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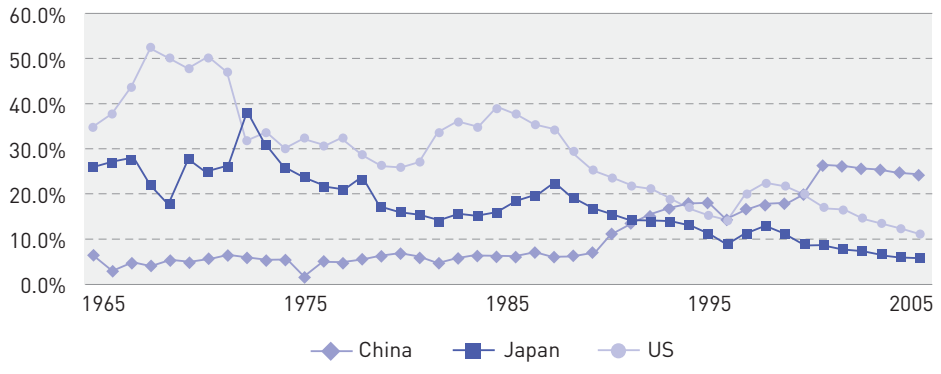
정부가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측면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정부는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완화시켰다. 대기업이 점유하는 수출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경쟁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심화시켰다. 전략적 유치산업이나 신규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처

럼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했다. 사양산업 및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 보호 등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 지속되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경쟁정책 등 간접적인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 대일 경제정책

1990년대 자유화와 세계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우선 탈냉전 이후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다. 199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 제3세계, 동구,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다변화로 일본 및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기업들의 경쟁이 시작된 것도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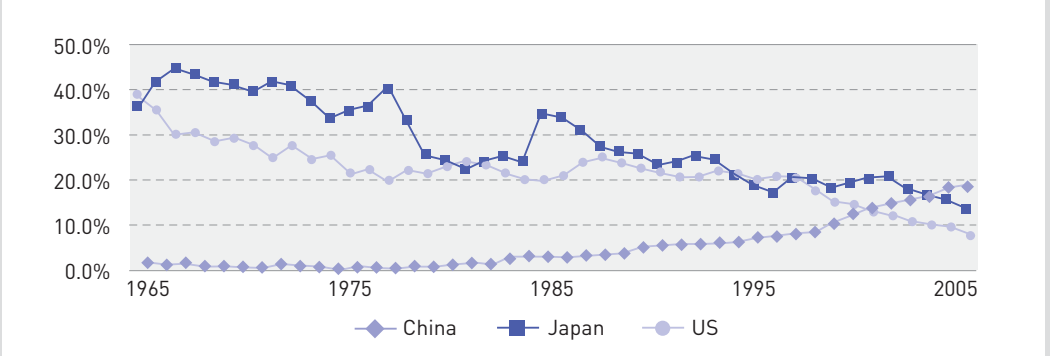
〈도표4-1〉 한국의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의 변화



출처: 한국은행, 주요 경제통계, 각 년호.

수입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은 수출시장 비중의 변화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반면 중국이 한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도 수입비중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역조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양국 간에 상존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1990년대에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도표4-2〉 한국의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의 변화



출처: 한국은행, 주요 경제통계, 각 년호.

경제자유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4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침체와 수출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정체됨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활성화,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출범 초기부터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수출부문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전략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과잉투자의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과잉투자가 대일역조를 확대시킴에 따라 역조축소와 대외경쟁력강화가 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무역역조 문제의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 기술이전과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무역역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적교류, 투자와 기술이전 등의 협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이에 대한 일본측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일은 기술이전과 협력, 공동개발을 위한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화를 이루게 되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과 1991년 1월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총리 방한시 양국 기술협력 문제가 중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부품 및 소재,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대외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입규제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7년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불균형을 초래하는 품목을 정해 수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실상의 수입규제였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의존적인 중간재, 소비재 등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개발이나 타국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77년 7월 7개 품목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344개 품목, 1990년에는 268개 품목, 1998년 88개 품목이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1999년 완전 폐지되었다. 사실상의 대일수입 규제 제도였으므로 WTO 협상에서 일본은 수량적 무역제한 조치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표 4-3〉 1990년대 한일 통상장관 회담 개최와 주요 내용

시 기	형식과 세부내용
1992.06	제1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한일무역 불균형 시정,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과학기술협력 재단 설치
1993.08	제2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무역 및 투자와 기술의 상호협력, 일본측의 시장개방
1994.05	제3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매년 1회 한일 투자와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 부품산업 협력
1997.07	제4차 한일 통장장관 회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확대, 벤처기업 협력, 젊은 기업인 교류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키이치(宮澤 喜一)수상 간의 정상회담 이후 1993년 8월 9일 제20차 대외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경제관계는 경제논리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대일 수입다변화 품목을 향후 5년 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일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결의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993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 지적재산권 회의에서 일본인의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EC와의 보호수준과 동일한 소급보호 수준을 부여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적 장애요인을 개선시켰다 (외교백서 1994).

이와 같이 1990년대는 전두환 정부에 이어 양국 간 정상외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협상도 활발해졌다.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회담이 1992년 1월 재개되었고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회담의 주요 내용은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이었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이 1992년 9월에,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기술협력을 촉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양적인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교류협력이 진전될 수 있었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 합의문

大韓民國 大統領
盧 泰 愚 閣下

日本國 總理大臣
미야자와 키이찌 閣下

1992년 1월 한·일 정상회담시의 합의에 따라 한·일 양 정부의 대표단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을 위해 그동안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는바, 동 협의의 결과 별첨과 같이 실천계획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 정부의 대표단은 한·일 양국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상호 협력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및 산업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인식을 깊게하여 가능한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금후 일층 건전하게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협의에 있어서 양 정부의 대표자는 한국측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 한국상품의 일본시장에의 참여노력에 대한 일본측의 지원, 한국측의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 환경의 개선, 한·일 경제계간의 상호이해의 증진, 양국의 산업간 협력의 촉진, 환경분야에서의 양 정부간 협력 등에 관해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양 정부의 대표단은 이와같이 하여 작성된 실천계획이 향후 양국의 정부간 및 민간간의 협력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정부의 대표단은 실천계획의 진척에 관하여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2. 6. 30

외무부 제2차관보
허 승

외무성 외무심의관
마쯔우라 코오이찌로오

Ⅲ_일본의 경제위기, 경제개혁과 한일 경제협력

1. 잃어버린 10년의 정치 및 경제개혁

1990년대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이 계속되었다. 1990년 소위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의 불황은 주식시장 붕괴, 기업활동 축소, 소비하락 등으로 이어지다 결국 거대 금융기관이 도산함에 따라 그 충격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불황은 정치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55년 이래 계속되어 온 자민당 집권에 대한 비판으로 1994년 선거제도, 정치자금 등의 정치개혁법이 통과되었다. 정치개혁법 통과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위기를 자초한 정치실패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지체와 정책실패는 일본의 경기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경제는 1960년대까지 10%의 고도성장을 유지하였고, 70년대부터는 5% 전후의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가 산업구조를 개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기업의 세계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1974년 1차 석유파동, 1979년 2차 석유파동 그리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였다. 1974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일본 경제는 전후 처음으로 -0.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3년에는 2.8%, 그리고 1986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세 차례의 경제위기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가속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효과적이고 신속했다. 1974년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과 더불어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인한 개발수요로 인해 1974년 2월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37%에 달했다 (이우광 1996). 후쿠다 내각은 적극적 수요관리 정책으로 지급준비율 인상과 임금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써 위기를 극복했다. 비효율적 산업에 대한 생산축소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전자, 기계 등의 산업에 대한 육성으로 산업을 효율화 시켰다. 2차 석유파동은 이미 1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체질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단기적이고 미미했다.

급격한 엔고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았던 1985년 전후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개선과 투자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였다. 기업은 구조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했고 해외로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엔고에 의한 수출감소에 대응했다. 반도체, 컴퓨터 등 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시기다. 원가절감 노력과 더불어 내수시장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엔화가치가 1985년 대비 40%나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20%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1987년의 무역흑자는 964억 달러로 플라자 합의 이전 1984년의 443억 달러의 두 배가 되었다(이우광, 1996).

그러나 이러한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호황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곧 붕괴되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시작으로 주식시장이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버블 붕괴는 잉여자금의 과잉과 과잉투자 때문이었다. 1985년 이후 정부는 금리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다. 1987년의 재할인율은 2.5%로 최저 수준으로 관리되었다. 통화공급의 증가와 기업의 거대한 이익금 등의 유동자금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었다. 과잉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됨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연쇄됨으로써 버블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5년 13,000엔이었던 일본평균주가는 1990년 30,000엔까지 상승했고 지가지수는 5년 사이 3배나 상승했다 (이우광 1996).

경기과열이 주식과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일본 정부는 1990년 재할인율을 2.5%에서 6%로 인상시켰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융자 규제와 단기양도중과세제를 도입하였다. 갑작스런 시장규제는 증권 및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버블 붕괴는 기업의 가동률 저하, 과잉고용 및 과잉채무로 나타나면서 장기불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전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된 것은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이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원인과 더불어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및 주가하락의 가치는 1995년까지 약 1,000조 엔으로 일본 GDP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100조 엔으로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긴축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버블붕괴를 복합불황으로 악화시키게 했다. 그 극복을 위해 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 등의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했다. 정 · 재계는 소비세 인하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요구하였지만 재정정책에 의존한 경기대책이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공공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치개혁과 경제정책의 복잡한 역학 관계 역시 경제개혁을 지체시킨 요인이다. 1980년대 말부터 관료와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은 자민당 주도의 정치체제에 대한 도덕성을 훼손시켰다. 결국 정치개혁은 1994년 정치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정치부패의 근원이라고 지목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거부터 진행되어오던 행정개혁도 적극 추진되어 1990년대 중반 하시모토(橋本) 정권은 관료주도의 경제체제를 정치주도로 전환하고 시장과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와 한일 경제협력

버블 붕괴 이후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복합적 역학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다자주의, 지역주의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은 이러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일본경제외교의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적극적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는 1985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년 이후다. 물론 이전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여러 형태의 지역협력 구상을 발표해왔다. 1957년 기시(岸) 수상은 동남아시아 개발기금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 따라 1966년에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창립되었다. 1967년 미키(三木)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외교'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아시아와 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 오히라(大平) 수상은 '환태평양연대구상'을 발표하고 아시아국가 및 태평양 연안 국가를 포함하는 '태평양경제공동체'를 발표하였다. 전후 초기 일본의 지역구상이 전후 배상과 원조의 맥락에서 구상되었다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일본의 지역개념은 안보 및 경제 부분의 이해가 반영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진창수 2006).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이러한 일본의 지역통합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간에 북미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 지면서 일본 경제의 중요 협력대상으로써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산성 내에 설치된 아시아태평양무역개발연구회(アジア太平洋貿易開發研究會)는 1988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NIEs와 아세안을 포함하여 아시아 · 태평양 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창하였다(진창수 2006). 통산성의 구상은 무역자유화와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 미국 등의 서구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역구상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1989년 APEC으로 구체화되었다(Terada 2008).

Ⅳ_한일경제협회의 주요 사업과 성과

1988년 10월 박용학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용학 회장은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방일수출촉진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본국내 유통시장 연구를 통한 일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관련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방일부품개발협력단과 더불어 한일중견경영인교류촉진단의 일본파견을 주도하는 등 한일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본 각 지방과의 정기항공편 개설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한일 경제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5년 5월 박용학 회장은 일본정부로부터 한일경제교류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일등서보장(勳一等瑞寶章)을 수상하였다.

1. 산업과학기술 협력

25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자회견하는 양국 단장('93)

1990년대 한일 경제협력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산업과학기술의 이전과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이 설립(1992. 9)된 것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되는 무역역조 문제는 계속적인 양국 경제현안이었다. 한국은 기술이전과 협력을 지속 요구하였고 일본측의 협력적 조치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역조는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 들면서 무역적자 폭이 축소되고 1986년부터는 대세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대일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훨씬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 1990년대 초부터 교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일적자 문제가 중요 경제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도,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업과학기술 협력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표4-4〉 한일 무역현황 1988~1996

(단위: 억달러, %)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출	금액	120.0	134.5	126.3	123.5	116.0	115.6	135.2	170.5	157.7
	비중	19.8	21.6	19.4	17.2	15.1	14.1	14.1	13.6	12.2
수입	금액	159.2	174.4	185.7	211.2	194.6	200.2	253.9	326.1	314.5
	비중	30.7	28.4	26.6	26.6	23.8	24.8	24.1	24.1	20.9
무역수지	금액	-39.9	-59.3	-87.6	-41.5	-78.6	-84.6	-118.7	-155.6	-156.8

출처: 통계청

양국 산업과학기술 협력은 1992년 1월 미야자와(宮澤) 수상 방한시 무역불균형 완화 및 산업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7개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진전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수상은 (1)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 (2)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3) 환경협력, (4) 산업간 교류협력 추진, (4) 한일 경제인의 포럼 구성, (5)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 (7) 그리고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의 개선 등에 합의하였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2회에 걸친 실무자 접촉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7월 1일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우선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양국에 각각 10억엔 규모의 재단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규모의 정부지원 및 연관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 공동연구, 인적 교류 이외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한 테마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위해서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원(KAITECH) 및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일본의 신기술사업단(JRDC) 및 일본산업기술진흥협회(JITA)로 하여금 공적 시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통산성이 보유한 외국특허의 영문 초록을 일본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하여 한국 산업기술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 일본 정부는 건설,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학, 정보처리, 농림수산 등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업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영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이전과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정보 등에 있어서의 상호교류가 구체화 되었다.

2.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력

(1) 인적교류

수출촉진단 상담회

구체적 실천계획에서는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조치도 구체화되었다. 합의사항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일 수출촉진을 위해 한·일 시장협의회가 대일 수출촉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의 기업이 시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적절한 후속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일본정부는 매년 10월 시행하는 수입확대 캠페인에 한국측의 참가를 지원하기로 하며 일본측 수입촉진단의 한국 파견과 수입촉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한국 우수상품전시회 등의 개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인력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합의되었다. 양국 정부는 대일수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일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디자인 지도 전문가를 1992년에 2명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무역진흥회는 설명회 및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 일본 내에 활동 결과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 한국측의 시장조사원 2명이 일본무역진흥회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또 일본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가 실시하는 무역실무자연수의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교류의 효율성

을 높이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양국 인적교류의 규모와 내용이 크게 진전되었다. 1993년 일본의 대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9월 6~15일간 민간합동 투자유치단이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후쿠오카 지역에 파견되어 일본 기업들과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은 매년 300여명 내외의 한국 기술자의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고 일본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연구조사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수출입 촉진단의 상호방문,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상호협력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사상최대의 방한국경제교류촉진단 279명을 이끌고 내한한 마쓰오 타이이치로(마루베니 회장)단장의 도착 기자회견. 투자와 기술협력, 수입상담등 폭넓은 활동을 발표

(2) 협의체 구성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가운데 양국 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제안되고 운영되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수상과 정상회담에서 21세기에 대비한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한일21세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한국측 위원장은 고병익 전 서울대 총장, 일본측 위원장은 스노베 료조(須之部 量三) 전 주한일본대사가 선임되었다. 21세기 위원회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1991년 양국 총리에게 정치, 경제, 과학기술, 역사, 문화, 청소년 교류 등의 5개 분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표4-5〉 한일경제인포럼 명단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본위원회	박용학(한국무역협회 회장)	히라이와 가이시(平岩外四)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유창순(전경련 회장)	에지리 고이치로(江尻宏一郎)	일본무역회 회장,
	김상하(상공회의소 회장)	사이토 히로시(齊藤裕)	신일본제철(주) 회장
	조석래(효성그룹 회장)	하구라 노부야(羽倉信也)	일한경제협회 회장
	강진구(삼성전자 회장)	요네쿠라 이사오(米倉功)	이토추상사(주) 회장
	정세영(현대그룹 회장)	와다리 스기이치로(渡里杉一郎)	(주)도시바 상담역
	홍성좌(한국무역협회부회장)	아카자와 쇼이치(赤澤璋一)	(재)기계산업기념사업재단 회장
운영위원회	주영석(한일경제협회부회장)	고지마 미키오 (小島幹生)	일본무역회 전무이사
	조규하(전경련 전무)	사이토 마사오(齊藤正雄)	전 일본무역회 전무이사
	김도형(KIET 일본실장)	다케우치 히로시(竹内宏)	(주)장은종합연구소 이사장
	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장)	도리이 야스히코(鳥居泰彦)	게이오대학 총장
		미요시 마사야(三好正也)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야마다 가쓰히사(山田勝久)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이시하라 마스오(石原增男)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한일경제인포럼은 1992년 미야자와 수상 방한 시 일본측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한일경제인포럼을 제안한 것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집중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2년 7월 발표된 실천계획의 제5항에 의해 양국 경제문제에 관해 경제인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써 한일경제인포럼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표출되었다. 한국은 본 포럼을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기계, 전자, 전기, 소재, 섬유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1년 정도 한시적 운영기구로 설치할 것과 따라서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결국 조속한 개최에만 합의하고 양국 재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일경제인포럼이 구성되어 출범하였고 1993년 10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무역, 기술협력, 투자 및 한일 중견 중소기업간 협력 분야 등에서 솔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각각의 개선대책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회의의 사무국은 각각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담당하였다.

〈표4-6〉 한일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 요약

의 제	보 고 내 용	
무 역 불균형	한국	(1) 임금 · 물가 안정, 금리의 인하 등을 통한 적절한 경제운용의 지속 · 강화 (2) 정부의 규제완화에 의한 민간의 활력과 창의의 적극 활용 (3)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4)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력 향상을 위한 부품공업의 적극 육성 (5) 외국인 투자촉진 및 기술협력을 위한 환경의 개선 (6) 일본 등 중요시장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의 전개
	일본	(1) 지속적인 내수확대 및 수입촉진을 위한 적절한 경제운용의 강화 (2) 시장원리에 입각한, 세계속에서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개방화 추진과 산업구조의 조정,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시정, 내외가격차의 시정, 유통구조의 합리화 촉진, 공공부문 건설시장 개방의 촉진 (3) 대한투자, 산업 · 기술협력의 추진 (4) 한국이 추진하는 일본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기술 협력	한국	(1) 기술도입에 관한 정부규제의 완화 – 절차의 간소화, Know-How를 포함한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이전 기술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2) 첨단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및 외국의 신기술 도입시 소요자금에 대한 우대제도의 확충 (3)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4) 일본의 퇴직기술자 초청활용(장기고용 허용 및 입국절차 간소화) (5) 공개된 일본 과학기술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6) 한국내 일본의 산업기술정보센터 설치
	일본	(1) 현장중심 생산기술의 육성과 이전 협력 (2) 정부기관 보유기술의 대한이전 협력 (3) 환경보호 · 에너지 기술 이전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4) 정부의 연구장학생 초청 협력
	공동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운영에 대한 협력과 연대 및 신규 사업의 발굴 협력 (2) 양국기업간 협력의 성공사례 발굴, 홍보 (3) 기업간 · 정부관련 연구기관간 신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4) 일본정부관계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 참여 (5) 신기술 전시회 개최를 통한 기술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투자 확대	한국	(1)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의 추진 및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 투자제한업종의 단계적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세제상 Incentive 확대, 토지취득 규제 완화 및 원활한 해외 자금 조달 지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금리인하, 노사관계의 안정 (2) 외국투자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협동정신 조성 (3) 적극적인 대일투자 유치활동 전개

의 제	보 고 내 용	
	일본	(1) 적극적인 대한투자 추진 (2) 대한투자 일본기업 생산품의 대일수출 확대 (3) 한국측의 대일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중소기업 협 력	한국	(1) 한국 중견 · 중소기업 경영자의 자조노력(기업가정신 함양) (2) 한국 정부 및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도 · 지원
	일본	(1) 한국 중견 · 중소기업의 경영자, 기술자, 기능공의 일본내 연수 실시 (2) 기업경영, 공장관리에 관한 지도협력 – 일본 전문가 또는 한국 전문가와의 공동으로 기업진단 및 제언, 일본 전문가 또는 한국 전문가와의 공동으로 업종별 중견 ·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조사 및 대책 제언
	공동	(1) 양국 중견 · 중소기업의 교류증진체제 정비 – 업종별 소그룹별 교류 촉진, 양국 중소기업 단체간의 교류증진과 상호 상주원의 기능 강화 (2) 한국측이 희망하는 중소기업형 이전가능기술에 대한 기업간 교류알선 (3) 한국의 중견 · 중소기업과 일본의 대기업간의 부품공급사업 추진 및 이에 대한 일본의 알선 협력

출처: 한일경제인포럼(1993) 최종 보고서

또 한가지 1990년대 설립 및 운영된 협의체는 한 · 일 신경제 협력기구(NIEP: New Initiatives for Economic Partnership)이다. 1993년 11월 6일 김영삼 대통령은 경주에서 호소카와(細川)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 일 신경제 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94년 4월 21일과 10월 서울과 도쿄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차 한일 신경제협력기구 회의에서는 의장요약 채택을 통하여 한일 양국이 경제논리와 호혜주의에 입각한 경제협력관계 기조를 확인하고 8개 경제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에 합의하였다(외교백서 1995).

1)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 및 한국상품의 대일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일측의 시장개방 노력 계속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2) 양국 기술협력재단간 공동사업 확대 및 재단기금 조성 촉진 및 한국의 부품산업 등 육성 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강화

3) 투자사절단의 상호파견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의 지속적 추진
4) 건설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
5) 한 · 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추진
6) 환경, 동양의학 및 한자연구 분야에서 실무협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공동협력
7) 의학, 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구체협력방안 협의 계속
8)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 강화

이와 같은 합의는 이제까지 양국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화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의제이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지적재산권, 한국 주재 일본 상사의 지위, 그리고 수입선다변화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이러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협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역조, 투자감소, 기술협력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는 지속되었다.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한 합의와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무역역조 문제는 1990년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일 무역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3.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1980년대 정상회담과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 의제들은 정부 간 대화와 별도의 협의채널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또 한편으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지도와 규제에서 협력과 탈규제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 간의 직접적 대화와 협력이 상호 증진되었다.

일본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구조전환 가운데 한일경제협회의 논의 의제도 다양화되고 변화하였다. 1990년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한일경제협회의

기능도 정부정책의 시행 기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토의와 민간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로 변화하였다. 양국관계에 집중하였던 의제는 동아시아, APEC, WTO, 세계화 등의 세계 경제질서 변화 가운데 양국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또 1992년 산업기술협력을 위해 한 · 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양국에 설립완료됨에 따라 기술이전과 협력, 인적교류 부문은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전담함으로써 전문화된 협력의 증진을 이룰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대체로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경제교류 증진, 산업기술 협력, 그리고 무역증진 등을 위한 의제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무역불균형, 산업과학기술이전 등과 관련하여 1993년 제25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양국 간의 현안인 기술이전문제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정부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정부 간에 협력의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한일경제협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었다.

25회 한일경제인회의. 축사하는 김경식 부총리('93)

이 시기 새롭게 시작된 신규사업은 한국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와 한일중견경제인교류사업(1996년 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명칭 변경)이다. 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 사업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협력의 방편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가 주관하였고 한국측의 생산성본부(KPC)가 카운터 파트너였다. 연수비용은 한일 각각 절반씩 부담하였다. 또 중견경제인교류사업은 양국의 중견기업경영인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경영 노하우와 경영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0여명의 젊은 중견기업인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4월 일본 카나자와(金澤)에서 열린 제20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

원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3개의 합동분과회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무역분과회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한중교역전망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2000년대에 있어서의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한일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한국측은 한일 간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국내에서 승인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본기업에 의해 발주된 한국 산 제품(OEM 생산) 및 한일 합작기업 제품의 통관에 있어서 일본국내 생산제품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일본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측은 한일분업의 실태와 전망 분석을 통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분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분야는 일본경제의 핵심산업이며, 한국 역시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략산업으로서 부품 · 소재 및 설비 등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한일경제 관계의 확대와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활동방향에 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해 서울에서 열린 제21회 회의에서는 각각의 합동분과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 첫째 양측 간의 오랜 현안이었던 무역불균형으로 '무역마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확대균형을 지향하는 무역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동시에 GATT체제 하의 건전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양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평적 · 상호보완적인 분업관계의 구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협력 등 국제적 ·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협력방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 및 자본 자유화, 증권시장의 국제화 등 한국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유화 ·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쌍방은 금융 · 증권 · 보험 · 유통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한층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경제인뿐 아니라 널리 국민적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를 더욱 심화시키

기 위한 이런 형태의 인적교류 또는 문화교류 등의 촉진이 요망된다.

제22회 회의는 1990년 4월 일본 고베(神戶)에서 열렸다. 경제협력분과회에서는 일본경제의 노사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투자기술분과회에서는 한일기술 및 투자협력에 대한 양측 발표가 있었다. 또한 무역분과회에서는 일본측에서 일본의 소비동향과 한국상품에 대한 기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서 일본측은 한국제품의 신뢰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혁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과 소비구조 더 나아가 사회구조까지 파악하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 사회구조의 중요한 변화로 인구구조의 변화, 기업의 노동조건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을 언급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세계정세 변화 및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다. "최근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지도력이 후퇴하고 냉전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 양진영에 의한 군사적 · 이념적 대립의 시대를 벗어나, 국제협조에 의해서 경제적 · 현실적인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보다 성숙된 관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 태평양경제권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3회 회의는 1월에 발생한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9월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양측 단장인사에서 한국측은 냉전구조의 변화와 블록화 현상 대두 등 세계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본 회의 전날에 있었던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동시가입을 달성한 데 대한 축하의 인사말과 함께,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각각의 합동분과회에서의 발표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같이하였다. 첫째 올해 들어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시장개방을 통한 수입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GATT체제 하의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

째 최근 양국 간의 투자 · 기술협력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제반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성숙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 문화적인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제24회 회의(1992. 4 일본 센다이)에 앞서 1992년 1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해 6월말까지 '한일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일 경제인에 의한 경제인포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 즈음하여 박용학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실천과제 가운데, 한국기업의 대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문제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등 양국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제도 결국은 우리들 민간업계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합동분과회 논의 결과, 양국 간의 투자 ·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기업이 상호신뢰와 경제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상호이해를 확대시키는 등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측은 인재육성과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일본측은 투자 · 기술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제25회 회의는 지난 해에 한일 양국에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치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가운데 1993년 4월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인사말에서 박용학 회장은 지난 2월 25일 실로 32년 만에 우리 한국에서 문민정치가 회복되어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일관계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두 나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측 하구라(羽倉) 회장은 미국경제 상황과 일본 및 유럽 선진국이 불황에 직면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발전도상국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속의 한일'과 '세계 속의 한일'이라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합동분과회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육성은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한국정부 및 경제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측은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등에 의한 기술인재를 육성, 조언한다는 점에 서로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94년 4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제26회 회의에 앞서 1993년 11월에는 1년여에 걸친 '한일경제인포럼'의 논의 결과로서 양국 정부에 제언서를 제출하였고, 본 회의 직전인 1994년 3월 하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호소가와(細川)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본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회인사에서 박용학 회장은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남북대화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을 우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일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측 기조연설에 나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한일경제협력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21세기를 첨단과학에 의한 사회변혁의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 공생의 시대,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웅비하는데 편견과 과거집착이 더 이상 양국의 공동이륙(共同離陸)의 뒷다리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도시바(東芝)의 와타리(渡里) 상담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경제협력'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한일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부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러기 위한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 육성과 대한투자촉진에 대해서도 과제와 함께 전망을 밝혔다.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은 1995년 제27회 회의는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인사에서 박용학 회장은 WTO출범으로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구축되어가는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상호보완 협조를 유지하면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한국이 1996년 OECD가맹을 앞둘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에 대해 축하하면서, 앞으로 양국 경제인 교류가 보다 왕성해져 서로 손잡고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선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자' 라는 주제강연에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여 '아시아를 위해 봉사한다' 는 자세를 취하고 한국이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새로운 선택이 두 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선린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이란 대전제아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동성명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일 양국은 APEC발전에 대한 협력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개선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측에서는 산업구조 개선과 기술개발력 향상 등에 종전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며, 일본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입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1996년 4월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개최된 제28회 회의 개회인사에서 박용학 회장은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의 조속한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한국기업의 성장에 주목하며,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을 흡수 · 합병한다든지 일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한국이 대일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한일 양국 기업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등 기존의 수직분업 형태에서 수평분업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양국 경제인은 기조연설 및 무역, 산업협력, 교류증진의 각 분과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 첫째 '활력 있는 글로벌 국가' 를 지향하는 일본과, OECD가입을 계기로 '21세기의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 을 구축중인 한국, 두 나라 모두에게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은 스스로의 장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제이다. 둘째 양국 기업의 수평적 · 보완적인 분

업체제와 제휴관계, 한국기업과 제품의 적극적인 일본시장 진출 등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실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장경제원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셋째 중소부품산업 및 소재산업의 육성은 한국산업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바, 기술인력의 육성 · 경영관리기법의 보급 등을 통해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이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니셔티브, 지역경제권의 충실화와 확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물류의 국제화 등 개별 기업차원을 넘어서 민간경제단체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다.

1997년 4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29회 회의에서 박용학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개최지 부산을 근거지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한일교류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협조를 통한 질서 있는 경쟁의 정신'에 따라 한일경제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OECD가입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은 아시아의 두 선진국으로 미래를 향해 협력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양국 간 관계의 틀을 초월해서 널리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적 발전을 리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각의 분과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첫째 세계경제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양국이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시한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 · 철폐, 고비용 구조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스스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임을 인식하여 양국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확대하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은 확대균형 방향으로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소재 ·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일수출 확대 노력을 하고 일본도 기술이전, 수입확대, 시장개방 촉진에 협력한다. 셋째 양국 간의 투자 · 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관계의 조성이 그 기반이 된다. 넷째 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 제품 · 부품의 표준화, 물류 조건의 개선, 지역 경제권의 충실화와 교류 확대,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대응, 에너지 개발과 확보, 월드컵 공동개최 등에 양국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표4-7〉 한일 · 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요약 1988~1997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20회	카나자와 1988.04.07 ~ 04.09	한국 97명 일본 134명	⦿ 경제협력분과회 1.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협력 2.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과 한국 및 NICs ⦿ 투자기술분과회 1. 한일산업기술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망 2. 투자 및 기술협력 : 미츠비시와 현대자동차사례 ⦿ 무역분과회 1. 한중교역전망과 일본의 역할 2. 일본 무역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 제13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5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8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6회 중소기업협력 전문위원회 ⦿ 방일 한국투자유치단 3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53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미션 73명 ⦿ 한일시장협의회 수출촉진단 8회 파견 ⦿ 청소년 교류 : 대학생 44명 방일
21회	서울 1989.04.25 ~ 04.27	한국 131명 일본 135명	⦿ 경제협력분과회 1.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와 금융시장 개방 2. 일본 유통업계의 한국제품에 대한 대응 ⦿ 투자기술분과회 1. 태평양 시대의 한일 기술협력 2. 투자 기술협력의 방향 ⦿ 무역분과회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북방교역 2. 지역적 경제통합과 일한 경제협력	⦿ 제14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6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해산 ⦿ 제7회 중소기업협력 전문 위원회 ⦿ 방일 한국투자유치단 3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64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41명 파견 ⦿ 수출촉진단 5회 파견 ⦿ 방한 중소기업협력미션 유치 ⦿ 대학생 교류 : 한 53, 일39 상호방문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22회	고베 1990.04.16 ~ 04.18	한국 102명 일본 160명	⦿ 경제협력분과회 1. 일본 경제의 노사문제와 향후 전망 2.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 투자기술분과회 1. 국제정세 변화와 한일 기술 및 투자협력 2. 한일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과 방향 ⦿ 무역분과회 1. 전후 국제무역에 있어 한일의 역할 2. 일본의 소비동향과 한국 상품에 대한 기대	⦿ 제15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7회 무역위원회 ⦿ 제8회 중견 · 중소기업위원회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49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39명 ⦿ 한일시장협의회 수출촉진단 5회 파견 ⦿ 대학생 교류 : 한 50, 일30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0명
23회	서울 1991.09.18 ~ 09.20	한국 114명 일본 138명	⦿ 경제협력분과회 1. 한국의 환경오염 현황과 정책방향 2. 한국경제의 중장기 정책과제 3. 한일 지역간 교류의 촉진 4. 일본 호텔업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5. 한일 무역불균형과 환율 ⦿ 투자기술분과회 1. 동북아시대의 한일 간 기술협력 2. 한일 상호 기술교류 –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3. 일본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 무역분과회 1. 한국무역 확대와 균형을 향하여 2. 한일무역의 장기전망 3. 아시아 NICs 상품과 일본의 소비시장	⦿ 제16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8회 무역위원회 ⦿ 제9회 중견 · 중소기업위원회 ⦿ 제1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 35명 ⦿ 방일수출촉진단 5회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38명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4명 ⦿ 청소년교류 88명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24회	센다이 1992.04.22 ~ 04.24	한국 85명 일본 134명	⦿ 교류협력분과회 1. 한일 간 투자환경 변화와 교류의 중요성 2. 한일 문화교류와 기업의 공헌 3. 동북 지방과 한국간의 경제교류와 전망 ⦿ 산업협력분과회 1. 한일 간의 새로운 기술협력 2. 일본의 물류의 현황과 향후 전망 3. 산업일반위원회 Task Force 보고 ⦿ 무역분과회 1. 한일 무역현황과 과제 2. 아시아에서 한일 경제관계 3. 최근 한일 무역불균형에 관하여	⦿ 제17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8회 무역위원회 ⦿ 제10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2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방일수출촉진단 5회 23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38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66명 ⦿ 대학생 교류: 한 49, 일25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3명
25회	경주 1993.04.15 ~ 04.17	한국 140명 일본 141명	⦿ 교류협력분과회 1. 대일 기능공 협력의 경험 2. 한일·일한 경제인포럼에 관하여 3.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일본 연수 4.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 ⦿ 산업협력분과회 1. 중소기업의 산업조정과 한일협력 과제 2. 환경보전과 기업의 역할 ⦿ 무역분과회 1.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산업협력 방향 2. ASIA에 있어서 한일경제관계	⦿ 제18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9회 무역위원회 ⦿ 제11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3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방일수출촉진단 4회 19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38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45 ⦿ 대학생 교류: 한 43, 일33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19명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26회	후쿠오카 1994.04.14 ~ 04.16	한국 103명 일본 142명	⦿ 경제협력분과회 1. 한일 양국의 지방간 교류와 전망 2. 큐슈, 야마구치 지역과 한국의 교류 3.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증진교육 4. 환경문제 Task Force 결과보고 ⦿ 산업기술분과회 1. 한일 산업구조 변화와 효과적 산업기술 협력 2.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와 아시아와의 기술협력 ⦿ 무역분과회 1. 한일신협력시대의 공존·공영을 위한 한일협력 2. 아시아 무역구조의 변화와 한일협력	⦿ 제19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0회 무역위원회 ⦿ 제12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3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방일수출촉진단 5회 164명 ⦿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 방일 투자유치단 60명 ⦿ 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 71명 ⦿ 대학생 교류 : 한 45, 일32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1명 ⦿ 한일경제인포럼
27회	제주도 1995.04.13 ~ 04.15	한국 128명 일본 130명	⦿ 경제협력분과회 1. 과거, 현재, 미래의 한일관계 2. 한일 관광산업의 진흥 ⦿ 산업기술분과회 1. 전환기의 한일관계와 한일 기술협력 방안 2. 아시아 지역의 기술협력의 미래상 ⦿ 무역분과회 1. WTO 체제하에서 양국 협력방안 2. WTO 체제하에서 한일 무역의 미래상	⦿ 제20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1회 무역위원회 ⦿ 제13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4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중소기업자동화연수 80명 ⦿ 방일수출촉진단 3회 147명 ⦿ 방일 투자유치단 109명 ⦿ 산업기술교류촉진단 40명 일본 시찰 ⦿ 대학생 교류 : 한 40, 일27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19명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구 분		참석자	주 요 안 건	합의 및 조치사항
28회	니가타 1996.04.18 ~ 04.20	한국 126명 일본 127명	⊙ 교류협력분과회 1. 21세기 경영가치관과 새로운 한일관계 2. 아시아 물류전개 현황과 과제 ⊙ 산업협력분과회 1. 한일 전자산업의 현안과 협력방안 2. 한일 산업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과제 ⊙ 무역분과회 1. 전환기의 한일 경제협력 2. 세계속에서 한일 무역관계	⊙ 제21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2회 무역위원회 ⊙ 제14회 중견 · 중소기업위원회 ⊙ 제5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제2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 방일수출촉진단 2회 74명 ⊙ 대학생 교류 : 한 40, 일22 상호방문 ⊙ 경제인교류촉진단 18명 방한 ⊙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 파견 34개사
29회	부산 1997.04.10 ~ 04.12	한국 118명 일본 126명	⊙ 교류협력분과회 1. 한일협력 환경변화와 지역간 협력확대 2. 일본에 있어서 경제금융의 구조개혁 ⊙ 산업협력분과회 1. 한일원자력 협력의 미래 2. 21세기를 향한 일본산업 ⊙ 무역분과회 1. 한일협력을 통한 구조조정의 가속화 2.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한일무역	⊙ 제22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3회 무역투자위원회 ⊙ 제15회 중견 · 중소기업위원회 ⊙ 제6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제3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 산업기술교류촉진단 34명 ⊙ 일본 한국투자조사단 방한 75명 ⊙ 방일수출촉진단 3회 107명 ⊙ 방일 투자유치단 74명 ⊙ 대학생 교류 : 한 40, 일36 상호방문 ⊙ 경제인교류촉진단 35명 방일

4.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구축

1990년대 초반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의 또 한가지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지방분권이 강하므로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대일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등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 단위의 경제협력 추진과 병행하여 일본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간 경제협력의 추진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보다 먼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단위의 협력 증진의 문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일경제협회는 1992년 큐슈 지역과의 경제교류회의를 시작으로 호쿠리쿠(北陸) 및 환황해 지역의 지역단위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일본 큐슈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일본 어느 지역보다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큐슈 경제권은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생산, 물류, 금융, R&D에 있어서 일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큐슈 지역은 일본의 4대 공업지역의 하나로 소재형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고도 가공조립산업과 정보관련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일본 전체의 40%를 점하여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고 있을 정도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마쓰다와 혼다 외에 일본의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 등이 후쿠오카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장래 일본 경제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4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제1회 한일(큐슈)회의 본회의('93)

큐슈회의 투자, 수출 상담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고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확대와 지역간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경제교류회의는 한 · 큐슈 지역간에 수많은 교류사업을 발굴 ·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투자, 기술협력 촉진에 기여해왔다. 또, 경제교류회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순회 개최함으로써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큐슈 지역간의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교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표4-8〉 제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의 제의 내용 및 합의사항

4대 제의 내용	
한 국	1) 한일(큐슈) 중견 중소기업간의 산업협력 촉진 2)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 기술자의 큐슈에서의 연수 3) 큐슈지역 퇴직기술자의 한국으로의 초청활용 4) 큐슈지역으로의 한국상품 수출증대
일 본	1) 큐슈의 FAZ(Foregin Access Zone : 수입촉진지역)에 대한 한국의 협력 2) 무역촉진을 위한 견본시 개최에 대한 한국의 적극 참여 3) 지역간 교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측면 지원 4) 환황해 경제권 형성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검토

7대 합의사항
1) 양측은 한국과 큐슈의 중견 중소기업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 중소기업관련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산업협력촉진단의 상호파견, 산업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정보교환 등의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한다.

7대 합의사항
2) 한국과 큐슈지역간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먼저 한국측은 큐슈의 FAZ에 대한 정보를 한국국내업계에 널리 홍보하고, 한국경제단체, 기업 등의 큐슈진출을 촉진한다. 또한 큐슈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한국산업분야별 전문전시회의 큐슈에서의 개최 및 큐슈 자연특산품의 한국에서의 물산전 개최에 협력을 검토한다. 한편 큐슈측은 한국상품의 대큐슈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1994년 한국의 대큐슈지역 수출촉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큐슈에서는 한국에 수입촉진단 파견을 검토한다.
3) 1994년 키타큐슈국제기술협력협회(KITA)에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의 기술자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측의 시행기관과 KITA는 연수대상, 규모,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4) 양측은 1994년부터 큐슈지역의 퇴직기술자의 한국에의 초청을 위하여 한국측은 초청희망기업의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큐슈측은 큐슈에 있는 퇴직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등 퇴직기술자 현황을 조사하여 상호 교환한다. 또한 양측은 각기 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동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초청조건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큐슈지역의 퇴직기술자 초청 지도사업을 추진한다.
5) 한국측은 상호보완적으로 무역, 기술, 투자 등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 통산성 큐슈통상산업국에 설치예정인 환황해 경제권 검토위원회에의 참여를 검토한다.
6) 양측은 한국연안 1개시(부산) 3개도(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큐슈 북부와의 교류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류사업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측면에서 지원한다.
7) 이상의 6개 항목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한국과 큐슈지역간의 무역, 산업 및 기술협력관계를 한층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를 1994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표4-9〉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경과

구 분	일 시	개최장소	실 적
제1회	1993.11.29	키타큐슈	• 한국에서 큐슈로 수출촉진단 파견(1994.11, 33개사) • 큐슈지역의 산업기술협력단 방한(1994.11, 26명) • KITA(키타큐슈 국제기술협회)기술자파견연수 (1994.8~12, 29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 활용을 위한 현황조사 등
제2회	1995.02.27	서울	• 한 · 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희망 수요조사(한국 12,000사, 일본 1,511사) • 한 · 일 중소기업 기술교류전 공동개최(한국 28사, 일본 60사) • 큐슈백화점협회의 수입촉진단 방한(1차: 1995.5 이즈쯔야 등 5개 백화점, 2차: 1996.1 이와다야 등 8개 백화점) • KITA 기술자 파견연수(1995.9~11, 29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지도(1995.10~12, 6명) 등 * 특히, 한 · 일(큐슈) 산업기술협력의 기본 프로그램에 합의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구 분	일 시	개최장소	실 적
제3회	1996.02.13	나가사키	• 한 · 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희망 수요조사(한국 12,000사) • 제1차 큐슈의 산업기술협력단 방한(1996.10, 18개사 25명) • KITA 기술자 파견 연수(1996.9~11, 30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지도(1996.11~12, 4명) • 환경산업기술협력단 파견(1997.5.20~23, 18개사 25명)
제4회	1997.06.09 ~ 06.11	전주	• 한일 양측 산업협력 희망 수요조사 상호실시 및 자료전달 · 홍보(1998.4) • 환황해 산업기술페어 참가요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 • 제2차 큐슈지역 산업기술교류미션 방한(1998.3월, 20명) • 큐슈지역 백화점내에 한국우량제품순회전 개최 • 양측 업종별 단체 · 기업인간 민간교류라운드 개최 (1997.6, 전주: 기계, 전기, 목형, 주물, 도금분야) • 대일수출촉진단 파견 및 한국우량제품순회전 개최(1998. 하반기) • 중소기업 기술자연수(KITA, 37명) 및 전문가초청지도(4명) • 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 양국내 상호홍보 • 한 · 일(큐슈) 자매도시간 경제교류회의 개최(1998.2, 46명 참가) • 인천시 주물 금형 기술협력사업 추진(1997.7~12) • 전북 · 가고시마현과 제3회 경제교류협의회 등 개최(1997.11) • '97 제주물산전 순회개최(1997.6, 후쿠오카 등)
제5회	1998.07.22 ~ 07.24	벳푸	• 한 · 일(큐슈(간 산업협력 창구기관 설치 및 협력실무자 큐슈 방문(1998.9) • 수출입관련정보 상호교화(1997.7) • 제2차 한국우량제품견본시 개최 적극 추진 • 제1차 환황해 산업기술페어 참가(1998.10, 110명) 및 환황해 인천세미나 개최(1999.3) • 제3차 산업기술교류미션 방한 및 대 큐슈 미션파견 준비 • 대일수출촉진단 파견 및 사츠마야키축제 • 한국우량제품순회전 등 개최(1998 하반기) • KITA 기술자연수 및 전문기술자 초청지도 • AOTS 연수생 수용기업 조사 및 큐슈측 협조(1998.11) • 구경련 등 투자환경 조사단 방한(1998 하반기) • 큐슈지역 투자환경설명회(1998.7월 벳푸, 후쿠오카, 1998.10월 키타큐슈) • 한일 산업협력 홈페이지 개설 및 큐슈통산국 사이트 개설 • 한 · 일(큐슈) 자매도시간 경제교류촉진방안 공동연구

5.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박영일 단장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던 한일 양국의 경제인 중 많은 수가 은퇴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차세대 육성의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젊은 경영인들이 선대 경영인과는 달리 일본어 의사소통이나 일본적 경영실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자칫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박태준 회장의 지적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중견 경영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1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안하고 일본측이 수용하여 「한일중견경영인교류촉진단」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198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측에서 9회, 일본측에서 5회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박영일 대농그룹 회장,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이 단장이 되어 미래 한일 경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젊은 경영인을 중심으로 미션을 주도해 나갔고, 모리타(盛田) 소니 회장등 일본TOP경영인초청 강연 8회, 경제전문가 세미나 및 패널디스커션 14회, 스터디 투어, 관심기업의 상호방문을 통한 기술제휴와 사업제휴 등 기업간 교류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일본의 중견경영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 미션의 명칭은 1995년 제27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일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변경되고 1998년 제 30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그리고 2003년 제35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한일중견경제인교류미션」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실시하다 2004년에 본 교류미션이 사명을 완수했다고 판단하고 양협회 사무국간 협의를 거쳐 제36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전적 해산키로 합의하고 해산되었다.

〈표4-10〉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실적

횟수	일시/장소	구 성	주요 내용
1	1989.10/도쿄	박영일 단장 등 20명	⦿ 竹内 宏 장은종합연구소 이사장 초청 세미나 ⦿ 산요증권 딜링룸/도시바 深谷공장 견학
2	1990.10/도쿄	박성용 단장 등 23명	⦿ 盛田 昭夫 소니회장 톱경영인 강연 ⦿ 牧野 昇 미쓰비시종합연구소 회장 초청 세미나 ⦿ ODS/후지쯔 시찰
3	1991.11/도쿄	박영일 단장 등 24명	⦿ 麻生 泰 아소시멘트 사장 톱경영인 강연 ⦿ 吉川 弘之 동경대학 교수 초청 경영세미나 ⦿ 샤프 전자기계사업본부/사가와 유통센터 견학
4	1992.10/도쿄	박영일 단장 등 19명	⦿ 館 豊夫 미쓰비시자동차공업 회장 초청 강연 ⦿ 佐藤 公久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상무 초청세미나 ⦿ 일본전기 我孫子사업장/일본통운 시찰
5	1993.10/서울 /대전	박영일 단장 등 27명/ 田中 宏明 단장 등 21명	⦿ 유창순 대신경제연구소 회장 초청강연 ⦿ 박우희 서울대 교수/이상우 서강대 교수/勝原 健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부사장 초청 세미나 ⦿ 대전EXPO시찰
6	1994.11/도쿄	박영일 단장 등 18명	⦿ 三村 康平 미쓰비시상사 상담역 초청강연 ⦿ 玉尾 豊光 노무라종합연구소 전무 초청세미나 池内 康彦 제일권은종합연구소 이사장/신영무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도시바 京浜우주동,과학관 견학
7	1995.10/용평	박영일 단장 등 36명	⦿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톱경영인 강연 ⦿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패널디스커션/김도형 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水戸 秀行 일본경제신문사 지국장
8	1996.10/도쿄	박영일 단장 등 35명 田中 宏明 단장 등 18명	⦿ 梅村 正司 닛꼬증권 상담역 톱경영인 강연 ⦿ 패널디스커션/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野副 伸一 아세아대학 교수 ⦿ 전문가 세미나 原島 望泰 칸다코퍼레이션 사장 ⦿ 임해부도심 빅사이트전시장 시찰

횟수	일시/장소	구 성	주요 내용
9	1998.11/광양시	설원봉 단장 등 33명	⦿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초청강연 ⦿ 패널디스커션/이종훈 중앙대 총장/千野 境子 산케이신문사 논설위원 ⦿ 광양제철소 시찰
10	1999.11/후쿠오카	설원봉 단장 등 34명/ 麻生 泰 단장 등 38명	⦿ 토론회 박수영 선문대학교 교수/임일신 큐슈국제 대학 이사/유화준 현해인클럽 대표 ⦿ 麻生 泰 단장 저택 간친회
11	2000.10/서울	설원봉 단장 등 39명/ 麻生 泰 단장 등 27명	⦿ 임길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초청토론회 ⦿ 椎野 謙次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초청세미나 ⦿ 송추컨트리클럽 하우스 간친회
12	2001.10/치바	설원봉 단장 등 28명/ 麻生 泰 단장 등 31명	⦿ 泉谷 直木 아사히맥주 집행임원 초청강연 ⦿ 大室 隆生 전 삼영전자공업 부사장 초청강연 ⦿ 문정익 매디슨재팬 사장 초청세미나 ⦿ 카즈사DNA연구소 견학
13	2002.10/도쿄	설원봉 단장 등 33명/ 麻生 泰 단장 등 43명	⦿ 寺島 實郎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 소장 초청 강연 ⦿ 세미나 高杉 暢也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신명식 현대모터재팬 사장 ⦿ 아사히맥주 이바라기공장 견학
14	2003.09/서울	설원봉 단장 등 43명/ 麻生 泰 단장 등 23명	⦿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초청강연 ⦿ 세미나 益子 隆 일본항공 부사장/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Ⅴ_소결: 경제협력의 다원화와 제도화

1990년대는 한일경제인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과도기적 시기이다. 탈냉전과 지구화와 함께 국내적인 개방화와 민주화가 국내구조와 한일관계의 구속력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일본의 경제위기로 국내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구조가 변화하였다. 경제개혁과 자유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기업간의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반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면,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의 초국적 이해와 선호가 점차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구조의 다원화는 경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의 선호와 이익의 분화를 초래하였다. 국제적 측면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구속력과 중요도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비정부간 초국적 협의체로서 한일경제인회의의 기능은 변화하였다.

이 시기는 양국 경제구조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던 시기이다. 일본경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진출을 확대하였고 1990년대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에 따라 일본은 동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 기업도 동구권과 동남아시아, 세계 각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었다. 한일 경제협력이 양자적 관계에서 다자적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 교역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대일의존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이 추진했던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은 일본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심화시켜 왔고 수출증가는 궁극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를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 및 민간차원의 협력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무역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21세기 한 · 일 위원회', '한일경제인포럼', '한일신경제협력포럼' 등의 특별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위해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기술이전과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러한 협력의 실질적 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또, 정부간 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의 구심점으로써 다양한 진전을 이루었다.

Ⅵ_인터뷰: 신덕현 한일경제협회 前 전무이사(1988.2~2001.9)

신덕현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회장은 1981년 협회 설립에 참여한 이래 2001년 전무이사로 퇴임할 때까지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지켜온 실무인사이다. 2010년 10월 20일 신덕현 회장과 김상준 연세대 교수, 조덕묘 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Q. 한일 경제3단체의 건의로 한일경제협회 설립 준비

A. 1981년 한일경제협회는 제5공화국 출범 직전 한일협력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한일 재계의 건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60년에 일한경제협회를 설립하고 국교정상화 이전까지 한일 재계차원의 협력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되자 일한경제협회는 한일 경제협력의 창구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한경제협회는 1969년부터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일본측 간사역할을 담당했고 반면 한국은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2년씩 순번제로 담당을 했습니다.

1980년 6월 한국 경제3단체와 일본 경제3단체의 경제정기교류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당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교류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당시 포항제철 사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박태준 회장께서 한일경제협회 설립의 책임을 맡아 그 해 9월부터 저와 이상수 전무, 박대진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님과 실무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무역협회, 전경련,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협조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대일투자협력과로부터 대일교역과 관련된 600개의 기업 리스트를 받아 이중 200여 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섭외했습니다. 협회 운영자금은 무역특계자금(무역진흥기금)에서 2억 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실무준비를 하여 1981년 2월 4일 발기인 총회를 하고 2월 12일 창립총회에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께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

하게 된 것입니다. 출범 당시 사무실은 충무로 극동빌딩에 위치했었습니다.

Q. 제 5공화국의 한일협력의 구심점

A. 이후 한일경제협회는 한일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설립 직후인 1981년 3월 3일 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 嘉寛 · 1987년 작고) 신일본제철 사장을 비롯한 일본 재계인사 16명의 영접을 담당했습니다. 이나야마 사장은 박태준 회장을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설립직후인 1981년 6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3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 경제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1982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14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입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안보경협을 이유로 40억 달러의 경협차관을 일본에 요청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양국 경협을 위해 민간에서도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고 일본측과 협의하여 이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Q.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구체화

A.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자본 등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역조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특히 무역역조 문제 해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제기획원과 한일경제협회는 무역역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 정책을 협의했습니다. 당시 대만의 일본 수출입 상황을 조사해보니 대만은 한국과 달리 상당 품목에서 대일 수출흑자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일수출 가능 품목을 정하여 적극적인 대일수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10월에는 마쓰오 타이이치로(松尾太一郎) 마루베니 상사 회장을 대표로 하는 대한 수입촉진단 144명이 방한하였습니다. 플라자 호텔에 숙소를 잡고 22층 23층에서는 대일 수출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부산까지 방

문하여 상담활동을 했지요. 1985년 5월 한국에서도 대일 수출촉진단이 파견되었습니다. 120개사 207명이 일본에 가서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1985년에는 한일 · 일한 시장협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Q. 미래 한일관계를 위한 인적교류

A. 박태준 회장님은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추진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교류사업입니다. 청소년 교류산업은 한일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간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박태준 회장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미래 한일 경제관계를 담당할 중견 경제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일중견경제인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일관계의 한국측 중심 인사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래 한일관계를 준비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과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께서 교류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단원구성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견기업인이 오너인 반면 일본은 전문 경영인이었기 때문에 의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한일협력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활동

A. 한일경제인회의(구: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는 1969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양국 재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경제협력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중견경제인교류사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일기계공업위원회와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는 이미 70년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계공업위원회는 1992년 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이 설치됨에 따라 기능의 중복 문제가 있었고, 무역위원회는 관세, 특허, 지적재산

권 등의 쟁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이 두 위원회는 한일산업무역회의로 통합되게 되고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일중견중소기업위원회입니다.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양국 경제제도나 체계상의 차이로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조직이 있는 반면 일본은 동일한 조직이 없어 일한경제협회에서 담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과 특성이 다르다 보니 행정적 업무협조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Q. 한일경제협회의 도약과 전환

A. 그간 한일경제협회에는 많은 변화와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92년 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이 설치된 것입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총리가 한일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구체적 기술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추진이 지연되자 박태준 당시 총재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당시 일한의원연맹 회장(전직 총리대신)과 담판을 지은 다음 협회로 전화를 걸어와 재단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애초 50억 원의 기금규모로 추진이 되었는데 당시 최각규 경제기획원 장관께서 재계의 협조를 받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일경제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민과 관에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는데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한일경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면 한일경제협회가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Q. 한일관계의 미래와 한일경제협회

A. 한일경제협회가 한일 양국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0여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써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현재 운영재원의

문제나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나 한일경제협회의 미래에 대해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 세대간의 인식의 격차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은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의 중장년 층은 반일 감정이 많고 젊은 세대도 역사인식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캠페인을 통해 인식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이것이 한일경제협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 교류사업의 촉진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박용학 회장님과의 30년

A. 한일경제협회에서 박용학 회장님을 모시면서 일본 각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박용학 회장님의 헌신과 노력은 한일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86년에서 1992년은 아마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지방정부에서는 한국과 정기편 개설이 중요한 현안의 하나였습니다. 박용학 회장님께서 10여 편의 직항노선의 성사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야기현 정기편 개설 후에는 명예현민증을 받기도 하셨지요. 외국인 명예 현민증은 1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일본과의 교류업무에 평생을 보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회수가 500회에 이르는데 이중 대부분은 일본에 다녀온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했던 지난 업무에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일경제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